

전략연구 2015-40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방안

김기흥

발 간 사

우리는 농업과 농촌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내부적인 붕괴는 물론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생산력, FTA로 인한 식량주권 축소는 농업인구를 급감시켰고 농촌사회는 공동화되어 왔습니다. 결국, 산업화로 인한 경제부흥의 토석이 되었던 농업과 농촌의 희생은 이미 오래전 잊혀졌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은 심각한 농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농촌이 처한 현실이 모두 조금씩 다르듯 충남의 각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귀농귀촌인을 낯설어하는 기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귀농귀촌인들이 감소하는 농촌 지역의 인구를 지탱할 것이며 위기상황에 놓인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 정책에서 더욱더 이들에게 주목하고 지원하여 귀농귀촌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보다 기존의 지역주민들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해결하고, 귀농귀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의 역량을 지역 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적 역량을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며 충남지역 농업농촌의 부흥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홍 박사를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정남수 교수님, 김정섭 박사님, 서동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귀농지원팀장님, 원내 김정연 박사님과 송두범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은 충남의 금산군, 논산시, 청양군, 서천군, 홍성군 등의 귀농귀촌 담당자분들과 농민들 및 여러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요약

제1장 서론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농업 자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충남지역의 귀농귀촌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귀농귀촌 정책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충남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충남지역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별 지원 정책을 파악하여 정착 인프라 기반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적 요소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 하였다.

제3장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농업이차보전사업으로서 용자에 대한 부분과 귀농귀촌활성화사업으로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을 통한 창업과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귀농인의 집과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위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삶의 질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

는 방향이 필요하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자체별 지원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2007년 부여군에서 가장 빨리 제정되어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조례상의 정책 대상은 주로 ‘귀농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팀도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전국적인 증가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지원 사례는 2014년 통계청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던 금산군과 논산시, 귀촌 가구가 가장 많았던 서천군과 청양군,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찾고 있는 홍성군의 사례까지 총 5개 지자체 사례를 정리하였다.

금산군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이른, 2007년부터 귀농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2015년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었고, 논산시는 딸기와 상추에 특화된 기존의 농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귀농에 힘을 쏟고 있었다. 서천군과 청양군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이유로 귀촌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양군은 최근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홍성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성향은 행동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 귀농귀촌을 하는 세대별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경향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남 지역의 귀농귀촌인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는 정착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괄적인 정책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영농과 관련한 기술교육 부분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체적 역량 발휘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을 정책제언으로 제안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1) 연구범위	4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5
1.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분석	5
1)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분석	5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6
2. 귀농귀촌의 범위	7
제3장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10
1. 전국의 귀농귀촌 동향	10
2.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	11
3. 정부의 지원사업	14
제4장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30
1. 충남의 지자체별 지원사업	30
1)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현황	30
2) 통계로 살펴본 귀농귀촌 현황	32
3) 조례로 살펴본 귀농귀촌 지원 현황	39
2. 지자체 지원 사례	47
1) 금산군	47

2) 논산시	51
3) 서천군	53
4) 청양군	56
5) 홍성군	59
 3. 흥동 사례 연구	64
1) 귀농인에 대한 인식	64
2) 다양화 하는 귀농귀촌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4
1. 결론	74
 2. 정책제언	79
 참고문헌	83

표 목 차

<표 1>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사업	15
<표 2> 정부의 귀농귀촌 예산 현황	16
<표 3> 귀농과 귀촌 교육 방향	18
<표 4>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프로그램 과정	19
<표 5> 2015년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시군	20
<표 6> 충남지역 귀농인의 집 현황	22
<표 7>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 기관 운영 상황 1	26
<표 8>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 기관 운영 상황 2	27
<표 9> 충남도의 귀농 정책 방향	30
<표10> 충남 시군별 귀농귀촌 관련 조례 현황	39
<표11> 충남 시군별 조례에 의한 귀농귀촌인 정의	40
<표12> 시군별 귀농귀촌 업무 담당 현황	45
<표13> 서천군 귀농귀촌 자체 사업 내역	55
<표14> 홍성군의 지역 활동 지원 사업	60
<표15> 홍성군 귀농귀촌 자체 사업 내역	61
<표16> 홍성군 귀농귀촌 프로그램	62

그림 목 차

[그림 1] 귀농 및 귀촌 가구 수	33
[그림 2] 시군구내 이동 상황	34
[그림 3] 귀농귀촌 전 이주 지역 가구 수	34
[그림 4] 전입가구원 수별 귀촌 가구의 구성	35
[그림 5] 충남 귀농귀촌 성별 가구주수 비율	36
[그림 6] 충남 연령대별 귀촌 가구 수	36
[그림 7] 재배작물별 귀농 가구 수	37
[그림 8] 금산군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 수	47
[그림 9] 금산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48
[그림10] 서천군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 수	53
[그림11] 청양군 세대별 상담 비율	5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농업 자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2014년 하반기 전략과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행한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은 홍동의 초창기 유기농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한 ‘유기농업’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였으나, 과제 진행 결과 유기농업의 메카인 홍성군 홍동에서조차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은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후계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고령화는 유기농업 자체의 승계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홍동의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충남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나타나는 우리 농촌 지역사회의 존립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홍동에서 살펴본 귀농귀촌은 현재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제1세대(가칭) 귀농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며, 2000년 중반에는 그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유입된 제1.5세대(가칭) 귀농인 그룹이, 2010년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유입된 제2세대(가칭) 귀농귀촌인 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 귀농귀촌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최근 2~3년에 나타나고 있는 2세대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도 유용한 정책기반 마련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착수 단계에서는 이러한 각 세대의 귀농귀촌인들을 유형화하고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유형화 및 특성의 파악보다는 다양화 되어가는 귀농귀촌인의 움직임에 따라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의 제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자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상당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대안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중점 사항을 바꾸게 되었다. 연구 대상지와 관련해서는 초창기 대상지였던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의 ‘지역간 비교 요인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특별히 지역의 구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대신에 통계청 자료를 통해 귀농귀농인이 많았던 지역들을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귀농귀촌 상황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범위와 관련해서는 ‘IMF시의 생계형 귀농까지 포함한 것은 광대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는 연구의 중점적 대상으로 두지는 않기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의견의 참고 정도로 제한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의 성공과 실패는 귀농귀촌 자체가 특정한 개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공여부의 판단에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마을의 특수한 상황, 가치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찾아 성공 사례를 모델화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지역화 과정과 성공 모형’을 찾고자 한 초기의 연구 방향에서, 우선은 충남지역의 귀농귀촌의 현황과 그에 따른 지원책들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대폭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먼저,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 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살펴보고, 충남에서는 어떠한 지원책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은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이유 및 정착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여러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의 가치를 이해한 가운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송미령 등 2015).

하지만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귀농귀촌의 현황, 실태를 정리하는 한편, 다양화되어가는 귀농귀촌의 경향을 통해 그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충남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의 귀농귀촌의 실태는 이미 원내에서도 유학열(2011, 2012), 조영재 등(2013)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다. 우선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는 한편, 다음 단계로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사례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일대일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충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유효한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충남지역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귀농귀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충남지역 전체
- 연구 대상: 기존의 정책 분석 및 5개 지자체 관련자
- 연구 방법: 정책 자료의 활용과 관련자 일대일 인터뷰 형식의 면접 조사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귀농귀촌 경향 및 실태 파악
- 귀농귀촌 정책 파악
 - 정부에 의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
 - 충남지역의 활용 정책의 분석
 - 지자체별 조례 파악
 - 주요 지자체 지원 정책 및 현황 분석
- 충남지역 정책 방안 제시
 - 충남지역 귀농귀촌 정책 방향 제시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분석

1)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분석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연구로는 유학열(2011), 이민수 등(2012), 조영재·조은정(2013) 등이 있다. 유학열(2011)은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를 이주 목적과 수입원, 생활 형태, 영농 형태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을 밝혔다. 충남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5개 유형 즉,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으로 도출,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민수 등(2012)은 귀농귀촌인의 귀농 동기에 따라 4개 유형 즉,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영재·조은정(2013)은 귀농귀촌인의 일반 마을과 전원주거단지라는 정주현황과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귀농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귀농귀촌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강대구(2007), 김성학·서정원(2014) 등이 있으며, 귀농귀촌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김형용(1998),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김백수·이정화(2013) 등이 있다. 또한 귀농인들의 영농 어려움에 관한 연구로는 김형용(1998), 김성수 등(2004), 서만용·구자인(2005) 등으로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 및 농지확보가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강대구(2010), 김정섭(2009), 진양명숙(2015) 등이 있다. 강대구(2010)는 귀농과 귀촌의 의미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섭(2009)은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진양명숙(2015)은 담론적 시각에서 귀농귀촌을 시대적 변화와 행위

자들의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에 수행된 질적 연구의 인터뷰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로 김정섭(2014)은 귀농인이 농촌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실증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많은데, 홍성효 등(2012)은 진안군 자료를 이용하여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백수 · 이정화(2013)는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 가운데 생태계 변인이 가지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부터 귀농귀촌인 조사집단을 구축하여 정착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박대식 · 남승희(2015)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상진 · 남기천(2015)은 귀농귀촌과 관련한 연령과 성별, 학력 등과 같은 개인특성과 귀농 동기와 준비기간 등 과정특성을 통해 경제활동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우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정리해보고 충남지역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지원 및 지자체별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정리 분석하고, 주요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정책 지원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홍성군의 귀농귀촌인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별 지원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정착 인프라 기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정책적 요소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귀농귀촌의 범위

그렇다면 과연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귀농귀촌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정책 방안의 제시에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의 수혜가 정확하게 귀농귀촌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귀농귀촌 연구에서 다루었던 귀농귀촌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형용(1998)은 귀농자를 과거에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떠나 도시로 이출했다가 다시 농촌에 들어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새로이 시작한 자로 정의하였다.

박영일(1998)은 귀농자를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도시 출신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취농자로 하였다¹⁾.

이정관(1998)은 귀농자를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자가 농촌을 떠나 비농업적 직업을 갖고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²⁾.

이동하(1998)는 귀농자를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를 변화시키고 그 곳에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유정규 외(2011)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광의의 귀촌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귀농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협의의 귀촌으로 하였다.

김정섭(2009)은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으로 하였다. 같은 김정섭의 경우에도 2012년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업으로 농업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귀농’으로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귀농’을 선택하여 생활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경우를 ‘귀촌’이라고 하였다.

1) 강대구(2010), 재인용(석사학위 논문)

2) 강대구(2010), 재인용(석사학위 논문)

3) 강대구(2010), 재인용(석사학위 논문)

황정임(2012)는 “귀농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이주’를 필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하고 있는 귀농은 ‘농촌 이주+농업 종사’인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농촌에 살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직업을 전환한 사람은 배제하게 된다. 또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는데, 동-읍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 읍면-읍면 이주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성정·이선주·진명숙·장희영(2012)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 중 농업이 주 소득원인 경우를 귀농으로, 농업이 주 소득원이 아닌 경우를 귀촌으로 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에서는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전입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여부, 이장 확인 등 실제 영농 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사업자,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⁴⁾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⁵⁾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⁶⁾을 말하고,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⁷⁾으로 하였다.

4)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7)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지금까지 귀농과 귀촌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정부도 귀농과 귀촌을 ‘농업’ 과 농촌에서의 ‘전원생활’ 이라는 구분하던 것에서 2015년 법률의 제정으로 그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데 이른다. 특히 귀촌인의 경우 학생과 군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를 귀촌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경우, 지원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충남지역에서도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을 어떠한 범위로 정할 것인가가 효과적인 지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충남에서의 지자체별 귀농귀촌인의 정의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연 귀농귀촌을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귀농을 통한 농업 창업을 명백히 밝히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이, 농업과 상관없이 농촌이 가지는 전원 혹은 자연의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내려온 귀촌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한편 귀농인지 귀촌인지 명백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또 이를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제3장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1. 전국의 귀농귀촌 동향

통계청에 따르면⁸⁾ 2014년 귀농귀촌 가구는 44,596호로 전년 32,424호와 대비해서 1.4배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는 2012년 11,220호(가구원수 19,657명)에서 2013년에는 10,923호(가구원수 18,825명), 2014년에는 11,144호(가구원수 18,864명)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으로는 2012년에는 경북이 2,080명으로 전체의 1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1,733명(15.4%), 경남 1,434명(12.8%), 전북이 1,238명(11%)이었고, 2013년에는 경북이 2,087명(19.1%), 전남 1,825명(16.7%), 경남 1,348명(12.3%), 전북 1,211명(11.1%)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경북이 2,172명(19.4%), 전남1,844명(16.5%), 경남 1,373명(12.3%) 그리고 충남이 1,237명(11.1%)으로 4위에 올랐다. 이러한 귀농지역의 결과는 경북이 영농조건이 양호하고, 농지 등 초기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은 전남과 전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 증가율(43.0%)이 평균 증가율 37.5%보다 높게 나타나 귀농귀촌이 베이비부머 이외 세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여자가 2012년 30.7%(3,445명), 2013년 29.4%(3,207명), 2014년 30.6%(3,405명)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주의 연령대별 비율은 2012년부터 2014년에

8)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그 정의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는 통계 상의 집계와도 관련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통계 상의 수치가 실제 수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전체적인 경향만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또 2015년 1월 제정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개념을 준용하여 작성 과거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귀촌통계는 종전에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구에 포함하였으나, 새로운 법적 정의에 따라 동기(목적)에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대부분 귀촌인구에 포함되게 되어 대폭 증가 요인 발생하였음을 밝혀둔다.

결쳐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로 나타났다. 50대는 2012년 38.3%, 2013년 39.3%, 2014년 39.5%였고, 40대는 2012년 24.7%, 2013년 23%, 2014년 22.4%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귀농인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하였다. 이는 농지가격 상승('14년: 전년대비 16.38%) 등 귀농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30대 이하의 귀농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REI, 2014).

귀촌은 2014년 33,442호(61,991명)로 전년 대비 1.5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귀촌은 경기도가 가장 많으나 그 비율(30.3%)은 감소세인 반면, 제주(1,649.0% 상승), 전남(267.0% 상승), 경북(137.4% 상승)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귀농귀촌의 동기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의 은퇴라고 하는 인구사회적 흐름과, 청장년층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자연과 가까운 전원생활을 이유로 정주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조사에서는 농촌의 삶을 선호하여 도시생활 탈피와 농업 등 경제활동(KREI, 2014)을 이유로 귀농귀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45.4%)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자연 속 여가생활(17.3%), 가족과 함께 하려고(11.4%), 자신·가족 건강(7.0%) 등으로 이어졌다(KREI, 2013). 또한 김철규 외(2011)에서는 역시 비슷한 순위로 경제적 이유(24.8%), 전원생활(22.9%), 자신·가족 건강(17.8%), 생태공동체 가치를 좇아(12.7%), 가족 친지와 가까이 살려고(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대규(2006)도 경제적 이유(29.0%), 인간다운 삶 추구(18.7%), 농촌생활이 좋아서(16.8%),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1%), 은퇴 후 생활 위해(12.5%) 등의 순으로 귀농귀촌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6차산업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귀농 농가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도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농촌진흥청(2014)에 따르면 6차산업 경영체 1만 가구 가운데 귀농귀촌인 경영 비율이 13.2%로 조사되었다.

2.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

정부는 앞으로의 귀농귀촌 방향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초기에서 이행,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귀농인 위주의 정책에서

귀촌인 정착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정주여건의 조성 and 삶의 질 여건 향상, 일자리, 그리고 체계적 사전준비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1) 정주여건 조성

이는 젊은 귀촌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귀농귀촌 탐색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의 지원 대상을 지역내 취업 또는 봉사활동 하는 귀촌인까지 확대

○ 귀농귀촌인이 조합을 설립, 신규 마을 조성시 입지 규제 완화 및 조합설립 요건 완화('15년)

* (입지제한) 농림지역 편입비율 50% 이내 → 자투리(2ha 이내) 농지 활용시 미적용

* (조합설립) 20명 이상 → 소규모 마을 조성 가능토록 5명 이상으로 완화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통합 지역개발 추진

- 중심지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다기능 복지센터 기능 강화 지원,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 등 포함

-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소규모 임대주택사업 허용 추진

- 기존 마을사업 및 읍면소재지 개발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농촌 중심권 통합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2) 삶의 질 여건 향상

다음으로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 ~ 2019) 이행과 연계하여 젊은 층도 살만한 교육문화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되겠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귀농귀촌 인구가 돌아가는 사유로는 농업 적응 어려움, 외로움, 고립감, 자녀교육 순(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 조사, 2014)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러닝 시스템 확충,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 주말 돌봄방,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2017년까지 48개소) 등 농촌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추진

* 농어촌학교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확충, 스마트 멘토링 등 실시

* 2017년까지 80개 농어촌 중학교에 3년간 5억씩 지원 (총 1,200억원)

○ ICT기반 문화교육보건 서비스를 농촌마을에 연계하는 창조마을 조성

* 모델 구축 및 시범마을 조성(9개소), 실증연구를 거쳐 확산방안 마련('15년)

○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기존 마을주민과 세대간지역간 융합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지원

(3) 일자리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6차산업화에 집중하여 창업보육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센터와 연계하여 귀촌인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 실시, 6차산업 멘토링 참여 기회 확대

* 귀촌인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 지원, 시설운영자금 융자 (2015: 300억원, 2%) 및 전문펀드(100억원) 지원 등

* 귀촌인을 6차산업 전문가 풀(2015: 450명)에 포함하여 6차산업 경영체에 경영마케팅 등 노하우 전수

○ 귀촌인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문화,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2015: 18개소) 지원

○ 농업창업자금 대출조건 개선 및 예비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중 (2015.7월 시행)

- 대출 한도 확대(2014: 2억원 → 2015: 3억원) 및 금리 인하(2014: 3% → 2015: 2%)

(4) 체계적 사전준비 지원

귀농귀촌의 사전준비를 위한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교육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 빈집 정보, 농지 확보방안 안내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시군 상담의 날’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정보 제공 강화

* 시군 상담의 날 : 매일 3개 시군이 동 센터에서 도시민 상담 등

○ 지자체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확대(2014: 40개 시군 → 2015: 50개)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 귀농귀촌센터로 육성

* 운영계획 : (2013) 제천, 영주, (2014) 홍천, 구례, 금산, (2015) 고창, 영천

○ 다양해진 귀농귀촌 희망자를 고려, 수요자 중심의 특화교육 확대

- 2030세대, 대기업 은퇴자, 제대군인, 퇴직경찰,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세분화

* 대학생 특별 교육과정(2015: 10개 대학), 2030세대 취창업과정(2015: 4개 과정)

○ 정착단계별 현장실습 중심 귀농교육 및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캠프 확대

* 현장실습 중심 귀농교육(농진청) : 품목별 영농정착기술교육(2015: 4,520명→2016: 8,000), 선도농가 현장실습(2015: 517명→2016: 800)

*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산림청) : (2014) 4개 마을 → (2017) 8개

3. 정부의 지원 사업

정부는 귀농귀촌을 관심과 실행을 거쳐 정착 단계로 보고 단계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1>은 이러한 단계별 지원 사업의 내용이 되겠다.

<표 1>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사업

단계	구분	주요 내용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인건비 236 (5명), 전문가료 320, 시스템 200, 홍보 67, 운영비 등 244 *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동교육 등 제공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종합정보, 상담 제공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귀농귀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습 위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3주~3개월 과정 -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
실행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1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 (국고 50%, 지자체 50%)
	귀농인의 집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2015~20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2013) 제천, 영주, (2014) 홍천, 구례, 금산, (2015) 고창, 영천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정착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2%, 주택구입 2.7% (65세이상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50%, 지자체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귀농귀촌 예산 현황은 표2와 같다. 농업이차보전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 두 개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늘어나고 있으나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가운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이 80억원에서 반으로 줄면서 2015년에 소계가 145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 교육은 2,800명 대상으로 늘어나 29.3억원으로 늘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50개 시군으로 2014년에 비해 10억원이 늘었다. 또 귀농인의 집 지원이 2015년에 10.5억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의 귀농귀촌 예산 현황

구분		‘13	‘14	‘15	비고
합 계		185억원	197억원	209억원	
농업 이차 보전 사업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예산 - 33.7억원 (융자규모) - 600억원	예산 - 38.7억원 (융자규모) - 700억원	예산 - 64.8억원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
	소계	152	159	145	
귀농 귀촌 활성 화지 원사 업	○ 귀농귀촌 교육	21.1억원 -2,000명	24.5억원 - 2,350명	29.3억원 - 2,800명	민간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35.8억원 - 35개 시·군	40.9억원 - 40개 시·군	50.9억원 - 50개 시·군	지자체 민간
	○ 귀농귀촌박람회	5억원	4억원	4억원	민간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0억원 -2개 시·군	80억원 -2개 시·군	40억원 -2개 시·군	지자체
	○ 귀농귀촌종합센터(2015 신규)	-	-	10억원	민간
	○ 귀농인의 집	-	-	10.5억원	지자체
	○ 귀농인농촌후계자체험관(하남)	10억원	-	-	지자체
	○ 귀농인농업창업보육센터(금산)	-	10억원	-	지자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서울 지역으로 이전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 및 상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정보 제공 - 중앙·지자체 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귀농귀촌 교육,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 지역정보 제공 - 품목, 임대농지, 빈집 등 지역정보를 시·군 귀농귀촌담당자가 안내 및 상담(도가 다른 3개 시군/일)

○ 전문가 1:1 상담 - 농업마이스터, 귀농선배 등이 준비단계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자문 서비스를 농촌 정착시까지 제공

○ 기본 공통교육, 주문형 교육, 정부정책 등 종합센터에서 전담하고 소그룹 강의 확대

* 소그룹 강의 : (현행) 매주 수요일 1회(야간) → ('15) 2회(주·야간)

(2)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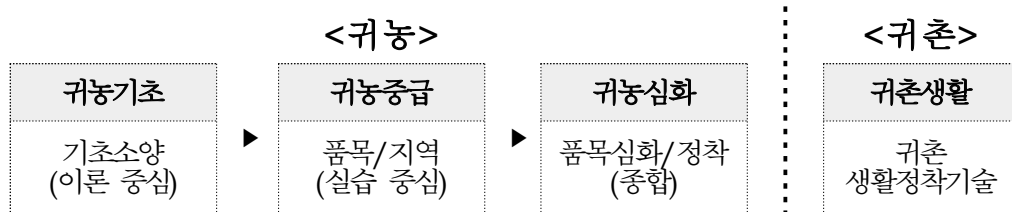
귀농귀촌 관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및 상담·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1회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최 및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기관 등 참가하고 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이루어진다. 행사 내용은 귀농선배와의 상담, 귀농귀촌 유형별 소그룹 강의, 지자체별 부스 설치 및 상담·안내 등이 이루어진다.

(3) 전문교육기관 귀농귀촌 교육

교육의 목적으로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준비·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자의 귀농귀촌 준비단계를 반영하여 매년 공개모집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귀촌 분야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론 강의, 현장실습 및 견학,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70~80%, 자부담이 20~30%이다.

<표 3> 귀농과 귀촌 교육 방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6차산업 및 특정품목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도 포함된다.

- * 제대군인 대상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교육 편성 및 운영(2기수, 80명)
- * 퇴직예정경찰 대상 귀농·귀촌 기초과정 편성 및 운영(1기수, 20명)
- * 북한 이탈 주민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2기수, 40명)

(4)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전국 50개 시·군(신규 12, 계속 38)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로는 시·군당 3년에 걸쳐 총 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예산(국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⁹⁾. 2007년 10억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8년과 2009년에는 20억원, 2010년에는 1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23억원, 2012년 26억원, 2013년

9) 정부의 50%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가 의견 청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마련하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사업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5억원, 2014년 40억원이었으며 2015년 현재 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목적에 맞게 각 단계별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는 쉽지 않아 공통적인 것들이 제시될 수 밖에 없으나, 홍성군과 같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다. 홍성군의 경우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2012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 평가’ 에서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 연구를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

<표 4>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프로그램 과정

단계	프로그램
〈1단계〉 관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향 인사 등 DB 구축 - 상담 등 정보 제공 - 도시민 농촌 초청 ○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2단계〉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문화 체험·체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귀촌인 농사 체험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택지, 빈집, 농지 정보
〈3단계〉 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실행 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일자리 모니터링 - 융자금 알선 - 이사비 지원 ○ 빈집 수리비 등 제공
〈4단계〉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착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제, 멘토링제 운영 - 영농 체험 교육 - 귀농인 모임 지원 - 집들이 비용 지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시군은 총 50개로 다음과 같다(표 5). 충남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의 4개 지역이 신규 또는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에 사업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2007년에 처음으로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홍성군과 청양군이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부여군이, 2016년에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새롭게 선정된 상태이다. 전남은 총 12시군, 전북은 총 11시군에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실시되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금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충남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공모 참여로 귀농귀촌 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2015년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시군

도	해당 시군	개소
강원	화천, 양양, 홍천	3
충북	단양, 보은, 영동, 충주, 제천	5
충남	금산, 서천, 홍성, 부여	4
전북	남원, 진안, 고창, 완주, 장수, 순창, 무주, 임실, 김제, 정읍, 부안	11
전남	곡성, 순천, 강진, 영암, 영광, 장성, 나주, 구례, 화순, 해남, 고흥, 진도	12
경북	상주, 봉화, 영천, 예천, 울진, 의성, 문경, 고령	8
경남	남해, 하동, 거창, 창녕, 의령, 함양	6
제주	서귀포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 귀농인의 집 운영

이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말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빈집 소유자의 승낙 하에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고 일정 기간(약 5년) 후에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귀농귀촌을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에서도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100개소가 건립되었고 예산은 30억원(국고 21억원 70%, 지방비 9억원 30%)이다. 입주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달에 10만원~20만원, 하루 1~2만원 정도이다.

2015년 2월 현재, 총 41개 시군의 14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원이 1개 시군 1개소, 충북이 4개 시군 8개소, 충남이 6개 시군 23개소, 전북이 9개 시군 40개소, 전남은 11개 시군 35개소, 경북 5개 시군 13개소, 경남 7개 시군 31개소로 전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 경남으로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의 가장 인기 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경우 20개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절반이 넘는 11개소가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 8개소는 도의 지원으로 임대료 없이 귀농귀촌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곳도 있었다. 최근 귀농귀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남 거창군의 경우는 15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모두 임대료가 없으며, 그 중 절반이 넘는 8개소가 도가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거주지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거 지원은 귀농귀촌인들을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3년 동안 총 30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70개소 건립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약 10.5억원(70개소×30백만원×지자체 보조 50%)이다. 지원 방식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건립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빈 집을 매입하거나 보건소 등 시군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빈 집을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은 홍성군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산군 2개소, 부여군 2개소, 서천군 4개소, 청양군 1개소, 예산군이 2015년도에 2개소가 마련되어 총 6개군에 23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표 6> 충남지역 귀농인의 집 현황

개 소	시군	사업자	규모 (m ²)	입주자		조성 년도	운영 재원
				임대료	임대기간		
2	금산군	바리실 마을	19	유지비납부	6개월~1년 (1개월 연장가능)	2009	국
		귀농귀촌희망센터	132	1만원/일	1일 단위	2010	도
2	부여군	부여군	64.8	16,330원/월	6개월	2013	군
		부여군	66.4	20,720원/월	(3개월 연장가능)	2014	도
4	서천군	서천군(귀촌실/도시 민)	39.06	5천원/일	1~3개월	2015	국
		서천군(희망실)	28.98	5천원/일	1~3개월	2009 2015	도 국
		서천군(행복실)	31.67	5천원/일	1~3개월	2009 2015	도 국
		서천군(귀농실)	39.06	5천원/일	1~3개월	2014 2015	도 국
1	청양군	귀농인협의회	55	20만원/월	12개월(최대)	2013	국
11	홍성군	홍성유기농영농조합	48	10만원/월	6개월	2010	국
		농부이반농장(4개소)	43	12만원/월	6개월	2012 2015	군
		세아유농장	50	15만원/월	12개월	2012	군
		거북이마을	49.5	2~8만원/월	12개월	2013	국
		홍성군귀농지원연구회	89.1	12만원/월	6개월 (1회 연장가능)	2013	국
		정다운 농장	39.6	15만원/월	6개월	2014	국
		홍성군귀농지원연구회	52.7	15만원/월	6개월	2014	도
		청촌	50	10만원/월	6개월	2014	국
2	예산군	덕산 가야한티마을	115.5	미정	미정	2015	국
		고덕면 호음새마을회	82.5	미정	미정	2015	국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운영재원 : 국고로 시행한 경우 ‘국’,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경우 ‘도’, 지자체 자체사업인 경우 ‘군’, 개인소유 빈집 등의 경우 ‘기타’

(6)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은 타운 형태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민 또는 귀농 실행 단계의 예비 농업인에게 단·중기 단위(1~2년 이내)로 일정 공간에서 주거제공과 창업 실습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형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준공 후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각종 수익·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로 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지원 조건으로는 개소당 8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하고 있다. 2015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1, 2년차 모두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이 지원된다.

2013년에는 제천, 영주, 2014년에는 홍천, 구례, 금산, 2015년에는 고창, 영천이 선정되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포장·마케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농특회계·농특세계정에서 마련되며 지원액 및 조건은 시·군당(개소당) 1년간 총사업비 80억원(국고보조 40억, 지방비 40억)이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체류형 주택, 농업생산, 창업실습 및 교육시설 등 귀농인 인큐베이터사업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7)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자금을 활용하고 정부에서 이차차이만 보조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2015년도 지원규모는 1,000억원(2014년도 : 700억원)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

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및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로 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의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주택구입 지원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한다. 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하며, 농과계 학교 출신자 영농 종사 일 수 3개월 이상, 농업인턴 3개월 이상 이수자는 “D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 창업의 경우,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영농·축산·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의 경우는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에 대해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구입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한다. 지원형태는 금융자금 100%,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창업 2%, 주택구입 2.7%(단 65세 이상은 2%)이다.

(8) 귀농인 실습 지원(선도농가 실습 지원)

이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것으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내용은 선도농가가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연수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 선도농가에게는 멘토 수당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인원은 517명으로 2015년 예산은 15억5100만원(국고 50%, 지자체 50%)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최근 5년 이내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으로 하며, 선도농가 자격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농가로 한다.

(9)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 기관 운영

그 외에 귀농귀촌과 관련한 전문교육 기관 운영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귀농분야(30개 과정) : 귀농기초 10/귀농중급 16/귀농심화 4

○ 귀촌분야(12개 과정) : 귀농생활 12

그 중에서도 충남지역에서는 귀농심화 과정 교육이 천안연암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다.

<표 7>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 기관 운영 상황 1

분야	기관명	과정명	기수	인원 (기수별)	시간 (H)	교육장소	교육일정
귀농 기초	경남생태귀농학교	경남생태귀농학교	2	25	70	경남 창원	(17)4/4~5/30 (27)8/29~10/31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	원주생명농업 귀농귀촌학교(통합)	1	30	33	강원 원주	(17)4/25~7/5
	부산귀농학교	실전귀농탐색(2030대상)	1	20	65	부산	(17)5/7~6/14 (27)10/8~11/15
	서울특별시 마을회	인생2모작 '농촌부자들 이야기' 교육과정	2	30	50	서울 동대문	(17)3/24~4/28 (27)6/2~7/7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	2	35	68	서울 동대문	(17)3/3~4/25 (27)9/1~10/24
	전략인재개발원	도시민의 성공적인 뉴라이프 귀농창업과정	3	30	55	대구 남구	(17)3/10~4/16 (27)4/28~6/4 (37)6/16~7/23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도시농부 귀농귀촌학교	1	30	111	서울	(17)4/7~7/18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귀농희망자를 위한 기초상식 교육	3	30	90	경기 화성	(17)4/11~5/16 (27)4/25~5/30 (37)6/11~7/16
	한국식품정보원	농산물의 가공화를 통한 성공적인 귀농설계	3	20	57	서울 영등포	(17)3/16~5/4 (27)5/11~7/6 (37)6/1~7/2
	MBC아카데미	도시민을 위한 현장체험형 귀농교육(기초)	3	30	65	서울 송파	(17)4/2~6/18 (27)4/2~6/18 (37)8/27~10/8
귀농 중급	농협경주환경농 업교육원	도시민귀농중급Eco-farm과정	1	30	119	경북 경주	(17)3/27~10/17
	마을디자인	귀농농장디자인(내농장마스터플랜수립)	4	24	38	서울	(17)3/27~4/11 (27)4/16~5/7 (37)6/25~7/17 (47)7/24~8/14
	산촌협동조합	성공귀농 교육과정(임/농산물 및 산악초 분야)	1	30	42	경기 고양	(17)4/4~6/6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귀농으로 농업법인CEO되는길	2	30	119	경기 양주	(17)4/25~6/6 (27)10/17~11/28
	수암영농조합법인	귀농틈새교육	1	20	55	광주	(17)3/6~5/22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	실습중심 과수기초교육	1	20	86	경기 여주	(17)8/10~9/13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귀농창업종합과정	1	25	105	서울 강동	(17)6/9~7/3
	전북귀농귀촌학 교영농조합법인	30평도제식 귀농교육과정	2	30	100	전북 정읍	(17)4/25~8/2 (27)5/16~8/16
	천안연암대학	2015도시민농업창업과정	2	30	334	충남 천안	(17)3/10~5/8 (27)8/18~10/16
	친환경농업 영양교육원	귀농을 위한 친환경과원조성	3	20	60	전남 영암	(17)3/28~5/17 (27)5/30~7/12 (37)8/22~10/25

<표 8>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 기관 운영 상황 2

분야	기관명	과정명	기수	인원 (기수별)	시간 (H)	교육장소	교육일정
귀농 중급	한국농경문화원	발효식품 귀농비즈니스모델과정	1	20	176	전북 진안	(17)4/2~7/11
	한국농수산대학산학협력단	귀농지역 품목선택과 소득증대 방안 교육	2	30	106	경기 화성	(17)5/16~10/10 (27)5/30~10/10
	한국농식품직업 전문학교/ 다산인재개발원	귀농귀촌나침반과정	4	30	100	서울 서초	(17)3/14~5/9 (27)5/2~6/27 (37)6/20~8/15 (47)8/15~10/17
	한국식품정보원	지역별 특화작물의 가공사업화를 통한 성공적인 귀농정착	3	20	63	대전 유성	(17)3/28~5/17 (27)5/16~7/19 (37)7/25~9/20
	화천현장귀농학교영농조 합법인	화천현장귀농학교	2	15	75	강원 화천	(17)3/14~3/22 (27)7/18~7/26
	MBC아카데미	도시민을 위한 현장체험형 귀농교육(중급)	2	30	82	서울 송파	(17)6/23~8/14 (27)10/13~11/24
귀농 심화	농업회사법인 랜드팜	버섯재배기술교육과정	1	30	105	경기 화성	(17)4/11~5/24
	서해영농조합법인	귀농인 친환경 복합영농 창업과정	2	25	383	경기 평택	(17)4/6~5/29 (27)8/31~10/30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	도시민 과수창업교육	1	20	467	경기 여주	(17)5/9~10/3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귀농창업 악용작물 교육	2	25	340	경기 시흥	(17)3/30~5/22 (27)8/24~10/23
귀촌 생활	가자유성농장으로	체험농장 창업	1	20	50	대전	(17)4/18~5/3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도시민을 위한 귀촌아카데미	1	30	100	서울 금천	(17)5/9~8/1
	농촌으로가는길	귀촌교육	3	30	40	전북 진안	(17)4/6~4/10 (27)7/6~7/10 (37)9/7~9/11
	대경직업능력 개발원	도시민 힐링 귀촌아카데미	2	30	54	대구	(17)4/7~5/17 (27)6/23~7/28
	미래인재개발협회	내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5	15	77	강원 평창	(17)3/21~3/28 (27)5/23~5/30 (37)7/18~7/25 (47)8/22~8/29 (57)10/3~10/10
	사회적기업 민들레코하우징	농촌주택 단열/에너지/계획 기술 및 창업교육	4	20	44	충북 영동	(17)3/27~4/5 (27)5/1~5/10 (37)7/3~7/12 (47)9/4~9/13
	송석문화재단/ 도봉숲속마을	귀촌생활 교육프로그램 희망농부학교	1	40	50	서울 도봉	(17)3/27~6/17
	자연에서 찾은 행복	자연에서 행복만들기 귀촌교육	2	30	104	충남 서천	(17)4/21~5/8 (27)6/16~7/3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촌창업종합과정	3	25	52	서울 강동	(17)4/7~4/17 (27)5/6~5/22 (37)8/19~9/2
	청미래재단	귀촌종합교육	2	30	102	서울 관악	(17)4/11~7/4 (27)7/25~10/31
	한겨레교육	도시민 귀촌생활 탐색과정	3	30	80	경기 성남	(17)3/17~5/2 (27)6/9~7/25 (37)8/18~10/10
	흙처럼 아쉬람	귀농귀촌 흙집짓기	1	20	70	강원 원주	(17)4/28~5/22

(10)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본적인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농지와 주택, 농기계류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

1.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사후 관리

-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동일), 그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1.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1) 감면 대상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2) 감면 대상 주택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3) 세제 지원 내용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한 농기계류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있다.

(11) 현장밀착형귀농닥터 제도

현장밀착형 귀농닥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 및 귀촌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고, 정착시 어려운 점이나 귀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조력자 또는 각 분야별 전문 도우미 제도를 일컫는다.

제4장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1.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현황

1) 충청남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충청남도의 귀농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표 9). ‘마을 공동체와 함께 성공하는 귀농’을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우수인력 1,500가구 유입, 정착률 전국 최고 유지’를 목표로 크게 유입과 정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충남이 가지는 귀농 여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핵심 계층별 전략을 차별화 하고 있으며 귀농창업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업 창업 지원을 확대 하고 자한다. 정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계별 교육과 실습교육 강화, 컨설팅과 귀농대학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표 9> 충남도의 귀농 정책 방향

비전	마을 공동체와 함께 성공하는 귀농
목표	○ 우수 인력 1,500가구 유입 ○ 정착률 전국 최고 유지
유입	○ 우수 인력 유입 - 충남 귀농 여건 홍보 강화 - 핵심 계층별 전략 차별화 - 귀농창업보육센터 운영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정착	○ 안정정착 도모 - 귀농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단계별 체계적 교육 - 귀농 실습교육 강화 - 귀농 컨설팅 운영 - 귀농대학(심화학과) 운영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2009년)에 따라 2009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5개년 계획 수립과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20일에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¹⁰⁾.

이를 바탕으로 추진된 2015년 귀농인 육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기관인 귀농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6개소에 걸쳐 15,912명이 상담을 받았고, 그 중 7,097명이 지원을 받는 성과를 보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지원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37.5%, 교육정보와 관련한 부분이 23.4%, 농업기술과 관련한 부분이 14.1%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는 후술하는 충남 지자체 귀농지원센터에서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귀농 준비 및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교육을 받은 자는 총 2,553명이었다. 그 중 영농기초 및 현장실습, 귀농대학 등에 참여하는 수가 가장 많았고 20개 과정에 1,463명이 참가했다. 그 외에 우수인력 유입관련 외부기관 및 단체와 협력 교육이 30회(843명 참가) 이루어졌고, 도시청년 농촌정착 나눔의 장이 3회(247명 참가) 개최되었다.

귀농귀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충남 금산에 체류형 귀농창업보육센터 1개소가 설치되었고 귀농인의 집이 총 6개군에 22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귀농인의 집은 홍성군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산군 2개소, 부여군 2개소, 서천군 4개소, 청양군 1개소, 예산군이 2015년도에 2개소가 마련되었다. 귀농을 위한 충남 지역의 홍보를 통해 3년 연속 수도권 귀농 유입 1위를 달성하였다.

충남의 귀농인 육성사업의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충남도 자료). 첫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둘째, 다양한 지원 사업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셋째, 귀농지원센터의 상담 능력 향상과 귀농 상담 후 상담자 지속적 관리. 넷째, 효율적인 귀농교육 추진을 위한 도, 시군의 역할 분담(도: 유입홍보 등 귀농희망자 중심

10) ‘다른 지역’이란 도 관할 지역 밖의 도시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충남에서는 충남 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귀농귀촌 지원의 대상자라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및 귀농대학 심화학과, 시군: 마을친화, 영농기초기술 등 현장중심 교육 및 귀농대학 기초학과). 다섯째,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운영 매뉴얼 작성 등 운영 강화. 여섯째, 홍보자료 개발 및 귀농박람회 참가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협조체계 강화로 귀농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2) 통계로 살펴본 귀농귀촌 현황

충남지역의 2014년 현재 귀농 가구 수는 1,237호, 귀촌 가구 수는 1,321호로 나타났다. 가구 원 수는 귀농이 2,012명, 귀촌이 2,460명이었다. 귀농 가구는 2013년 1,177호에 비해 5.1%(전국 2.0%) 증가하였으며, 귀촌 가구는 2013년 679호보다 94.6%(전국 55.5%)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 귀농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산군 118호, 다음으로 논산시가 114호, 태안군이 105호로 나타났다(그림 1).

금산군은 대전시라는 광역 도시권과 가깝다는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귀농 인구들의 선택이 많은 지역으로 자체적인 귀농대학운영을 통해 교육적인 측면에 힘을 쏟아 왔다. 정책적으로는 2010~2012년에 걸쳐 금산군 귀농귀촌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귀농귀촌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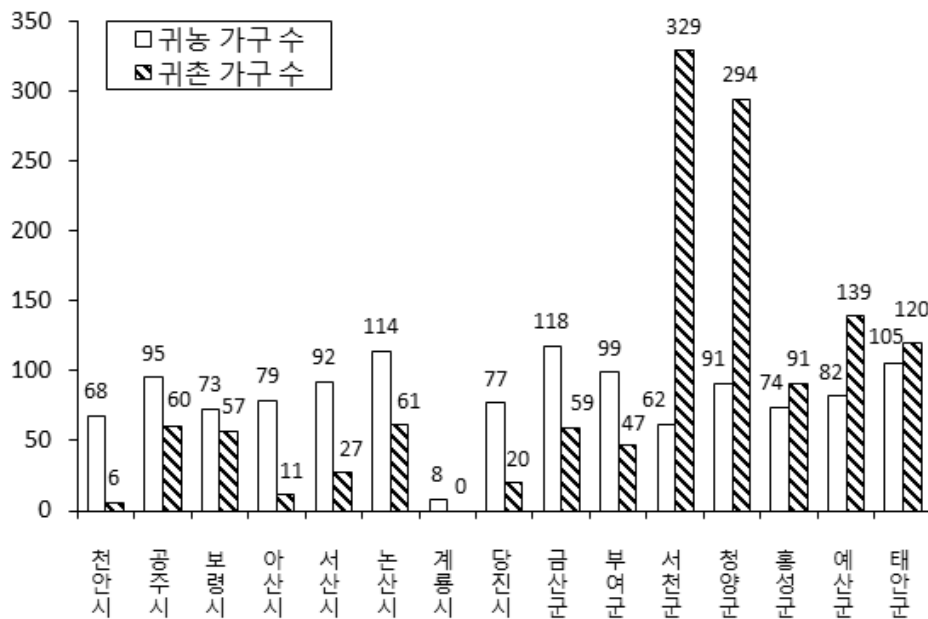
논산시의 경우는 2014년 8월에 귀농귀촌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딸기 재배의 주산지로서 본격적인 소득 작목에 대한 영농으로 귀농인의 정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영농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도 귀농인의 수가 높는데, 귀농인을 포함한 귀농귀촌 가구 수가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호에서 2011년 33호, 2012년 46호, 2013년 105호, 2014년에는 225호(413명)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화합 행사’ (비용 50만원 지원) 등 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대전일보 2015년 9월 7일자 기사). 이러한 노력으로 태안군은 2016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귀촌 가구 수는 서천군과 청양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천군의 경우, 329호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집을 짓기 위한 땅값이 저렴하다는 요인이 크

게 작용했으며, 이 때문에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어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귀촌인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귀농귀촌 교육과정 중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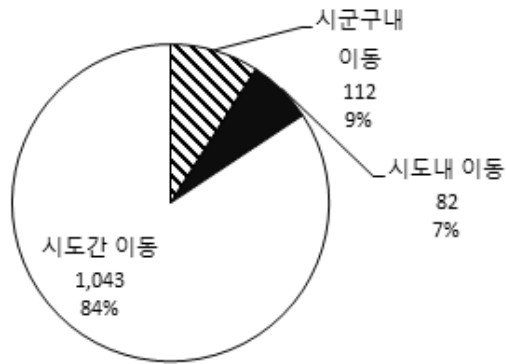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청양군이 294호로 나타났는데, 청양군의 경우는 2012년부터 적극적인 귀농 귀촌 부양 정책이 시작되어 매년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청양군은 2012년 귀농귀촌 인구를 합하여 191명, 2013년 356명, 2014년에는 4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귀농 및 귀촌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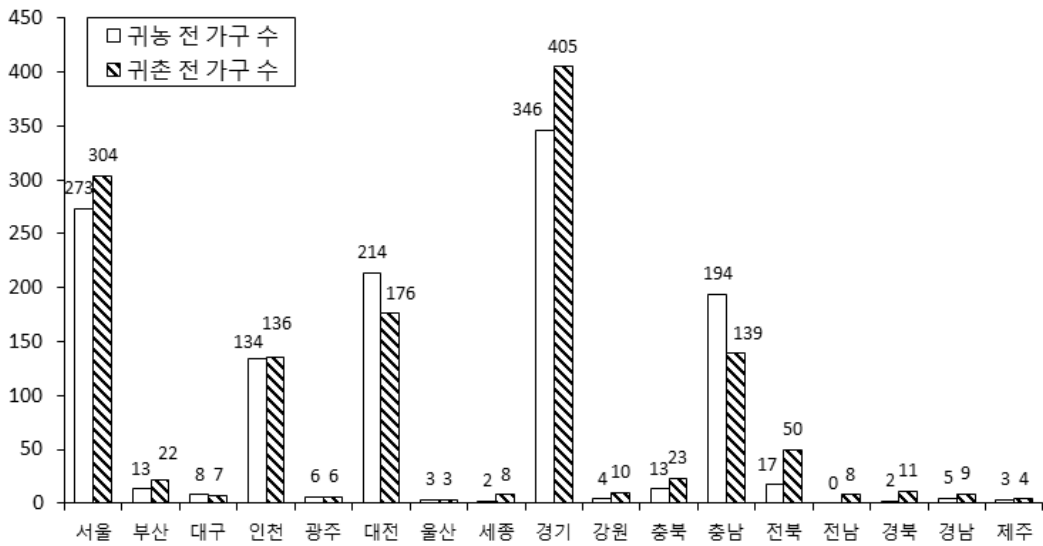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시도간 이동이 전체의 84%(1,043호)로 나타나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2.4%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림 2] 시군구내 이동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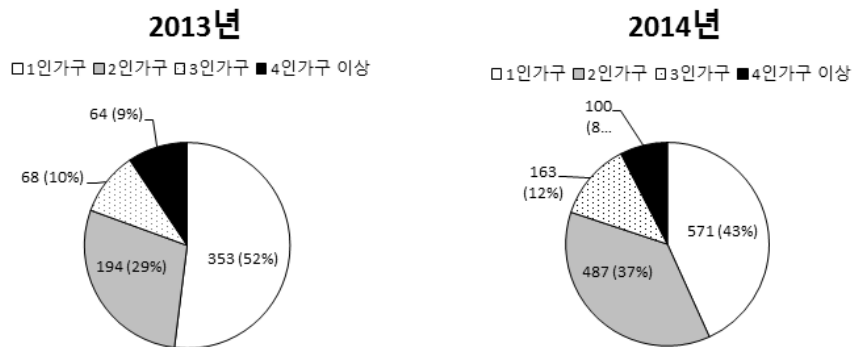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 귀농귀촌 전 이주 지역 가구 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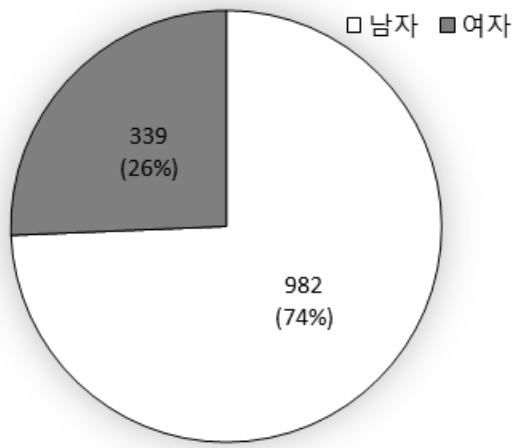
충남지역에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기 전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귀농 346호, 귀촌 405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서울 귀농 273호, 귀촌 304호로 수도권으로 부터의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경기,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과 일치하며, 비교적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충남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경기, 서울의 경우는 귀농보다도 귀촌 가구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터전을 바꾸려는 목적의 이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인근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귀농 214호, 귀촌 176호, 같은 충남지역이 귀농 194호, 귀촌 139호로 나타났으며 인근 대도시의 경우는 귀촌보다는 귀농이 더 많아서 농사를 목적으로 근처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전입가구원 수별 귀촌 가구의 구성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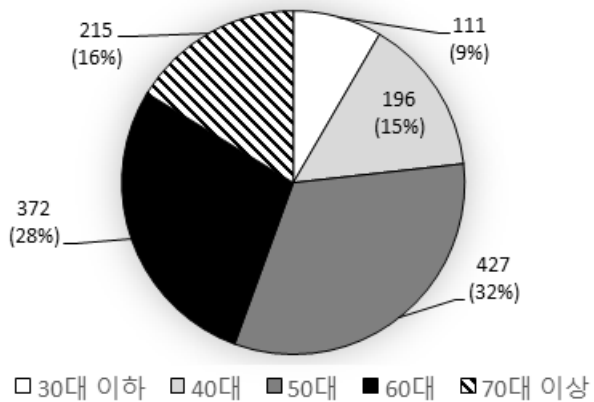
전입가구원 수별 귀촌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모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귀촌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1인 가구가 52%(353호), 2인 가구가 29%(194호)로 1인 가구로 귀촌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고, 2014년에는 1인 가구 43%(571호), 2인 가구가 37%(487호)로 2인 가구의 귀촌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이유로 홀로 귀촌을 감행하던 경향에서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더욱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충남 귀농귀촌 성별 가구주수 비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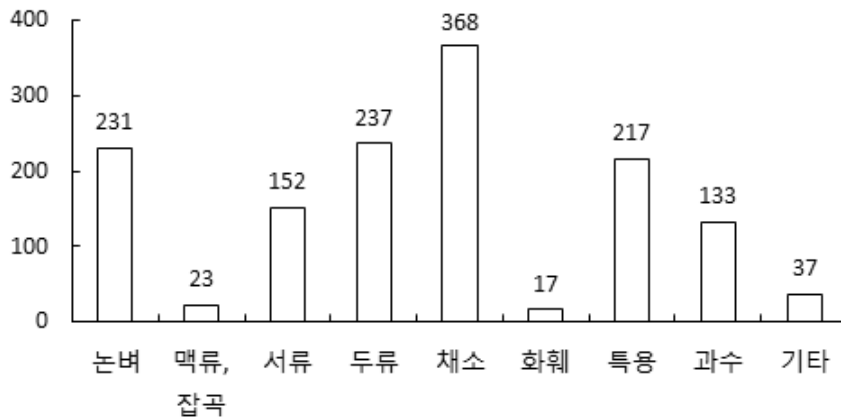
충남지역의 귀촌 가구 가운데 총 남녀 가구주 수는 남자 982호와 여자 339호였으며 전체 남녀 비율은 남자는 74%, 여자는 26%로 남자 가구주가 여자 가구주에 비해 약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충남 연령대별 귀촌 가구 수

자료: 통계청

충남지역의 귀촌 가구 가운데 총 연령대별 귀촌 가구 수는 50대가 32%(427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가 28%(372호), 30대 이하는 9%(11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재배작물별 귀농 가구수

자료: 통계청

충남지역의 귀농 가구가 재배하는 작물로는 채소, 두류, 논벼, 특용작물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7). 채소는 386호가 선택하여 가장 많았고, 237호가 두류를, 231호가 논벼를 선택했다. 이는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는 충남지역에서조차 논벼의 경우, 기존의 농가들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기계화의 발달로 영농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여 귀농인의 논 농지 구입 및 임대조차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¹⁾. 한편 전국적으로는 채소, 과수, 특용, 두류, 논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소의 경우는 경작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귀농인의 진입이 비교적 쉬운 작물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 귀농인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는데 유기농 쌀이 유명한 홍동면의 경우, 논 매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임대조차도 불가능하여 벼 재배에 대한 귀농인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의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 임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3) 조례로 살펴본 귀농귀촌 지원 현황

충남에서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¹²⁾가 2007년 부여군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충남 시군별 귀농귀촌 관련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0). 제정된 시기는 부여군에 이어 2008년에 금산군이, 2009년에는 보령시와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 차원에서도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0년에는 아산시, 2012년에는 논산시, 청양군, 태안군, 공주시, 당진시의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었으며 ‘귀촌’까지 언급된 곳은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의 다섯 곳에 불과했다. 충청남도 역시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다.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곳은 네 곳으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이 있다.

1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결정을 거쳐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조례는 그 지역의 생활환경, 풍습,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률보다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 제정의 오류를 지역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안효섭, 2014).

<표 10> 충남 시군별 귀농귀촌 관련 조례 현황

	조례 명	조례 제정	조례 시행	담당 부서
충남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2009. 7.20	2015. 9.30	
천안시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08. 9.26	2014.11.21	농업정책과
공주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2.10.10	2015.12.8	농촌진흥과
보령시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5.12.21 전부개정)	2009. 4.10	2015.12.23	농업기술센터
아산시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0. 1. 5	2015.10.26	유통지원과
서산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5.11	2015. 1.26	농정과
논산시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2. 3.12	2015. 1.2	농정혁신
계룡시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3. 8. 9	2015. 1.20	농림과
당진시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2.12.31 제정)	2012.12.31	2016. 1. 1	농업정책과
금산군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08. 7. 7	2015. 4.15	농업정책과
부여군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07.11.16	2016. 3.31	농업기술센터
서천군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9.7.22 제정)	2009. 7.22	2015.11.20	농업기술센터
홍성군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3.10.30 제정)	2009. 9.15	2015.12.30	기술개발과
예산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09. 7.20	2010.12.30	농업기술센터
태안군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12. 2.29	2015. 1.13	농정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1>은 각 시군별 조례에서 언급하는 귀농귀촌인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귀농인의 정의는 제2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귀농귀촌 정책 대상을 한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귀촌인까지 정의된 곳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 명에 ‘귀촌’ 이 언급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의 다섯 곳에 공주시까지 더하면 총 여섯 곳으로 나타났다.

정의의 단계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세 곳으로 천안시가 ‘만 55세 이하’, 서산시가 ‘50세 미만’, 계룡시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 로 정하고 있다. 충남으로 이주하기 전 타 지역에서 거주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서산시 한 곳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 상에서는 ‘1년 이상’ 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전입한 후의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은 서산시와 계룡시가 ‘6개월 이상’ 으로 정하고 있고, 태안군은 ‘1개월 이상 5년 이하’ 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표 11> 충남 시군별 조례에 의한 귀농귀촌인 정의

	귀농귀촌인의 정의
충남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	“귀농인”이란 귀농 당시 만 55세 이하인 자 중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천안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공주시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산시	“귀농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아산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귀촌인”이란 아산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산시	“귀농자”란 50세 미만의 사람 중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비농업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논산시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논산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룡시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계룡시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	“귀농·귀촌인”이란 타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어촌”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당진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산군	“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여군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인으로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귀농귀촌인의 정의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서천군	“귀농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양군	“귀농인”이란 청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청양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홍성군	“귀농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 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생활을 위하여 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산군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태안군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에 전입하기 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태안군에 2명 이상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이하인 사람 3.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1: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주2: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크게 목적, 정의를 나타내는 ‘총칙’ 과 교육훈련과 정착자금, 시설 보조 등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후 관리와 지원의 취소 등의 ‘보칙’ 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충남 시군별 조례 가운데 특이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주시는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액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시설 보조에 대해 귀농 신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 중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 가구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조). 귀농정착 장려금으로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에 대해 300만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제11조). 또한 조건으로는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4개월 후로 정하고 있다.

보령시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주민등록을 전입 후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또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5년마다 육성·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곳은 보령시 외에 아산시와 서천군에 불과하다.

보령시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과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조). 농지임차에 대해서는 세대당 최고 1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으며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제3조). 또한 주택수리비는 지원대상을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하고 있다(제4조). 교육훈련비(제6조)와 관련해서는 첫째 현장실습비 지원으로 가구당 400만원(80만원×5개월) 이내로 하며, 지원방법은 귀농어업인이 선도농어가와 시 업무 담당자 임회 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농어가에서 영농·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로 수강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한 귀농업인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귀어가·귀어촌정착과정 수료자 중 시장이 영어정착을 인정한 귀어업인’ 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가구당 50만원 이내이다.

서산시는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5년 이내’ 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3년 이내’ 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금산군도 역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비 보조액을

최고 300만원 한도로 정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6조2항). 시설 보조에 대해서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7조제1항). 또, ‘귀농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로 제정(2015.2.16)하여 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입교자에 대한 규정까지 정하고 있다.

부여군은 귀농지원보조금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부여군에 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후 귀농지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또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있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조).

서천군은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충남 시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위탁의 경우에 대해서 조례 상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¹³⁾. 또 지원에 관해서는 귀농인의 집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해 130%를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제15조). 또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 빈집수리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제3조).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비 항목으로 가구당 360만원(60만원×6개월) 한도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강료 지원은 그 대상을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제6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액을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자부담 비율은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제7조).

홍성군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항목으로 주택수리비 지원과 청년 귀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 및 귀농학교 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제4장). 주택수리비 지원으로는 전입 신고한 20세 이상 65세 미만 귀농인 중,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400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청년 귀농정착 장려금

13) 홍성군은 시행규칙에서 위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은 이주한 20세 이상 40세 미만 귀농인에게 청년 귀농정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 귀농정착 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전 입신고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귀농정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9조제2항), 귀 농정착 장려금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제3항).

예산군은 귀농인 지원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제3조). 대상으로는 2007년 1월 1일 이 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사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전 가족이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제1항),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제2항),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제3항)로 정하고 있다. 예산군의 경우, 2009년 7월에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2월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데 제1항의 ‘2007년 이후’ 라는 문구만을 보더라도 귀농인 지원 대상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1월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농림 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어 시도는 물론 군구 단위에서까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법률 의 제정으로 ‘귀촌인’에 대해 초, 중등, 고등학생과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 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제외되어 기존의 통계상에서 집계하던 방식이 수정되면서 그 수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에 지원이 실제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대상으로 한정 되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12는 2015년 현재 충남 시군별 귀농귀촌 업무 담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충남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귀농지원팀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시 단위에서는 도농교류나 도시농업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주 시와 같이 시의 주요 시책으로 언급이 된 경우에는 시정발전연구과 하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 책이 마련되어 있었고, 논산시의 경우는 딸기나 상추와 같이 주 작목 재배를 중심으로 귀농정 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기술과 하의 귀농귀촌지원팀이 마련되어 있다. 귀농귀 촌 지원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와 귀농귀촌 업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귀농귀 촌에 대한 많은 업무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2> 시군별 귀농귀촌 업무 담당 현황

	담당 과	담당 팀
천안시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공주시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
보령시	농업지원과	교육귀농팀
아산시	유통지원과	도농교류팀
서산시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
논산시	친환경기술과	귀농귀촌지원팀
계룡시		사회개발팀
당진시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
금산군	기술지원과	농촌관광팀
부여군	기술지원과	귀농지원팀
서천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
청양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팀
홍성군	기술개발과	농촌체험팀
예산군	기술보급과	정보개발팀
태안군	지도개발과	귀농귀촌담당

자료: 관련 시군 홈페이지

2. 지자체 지원 사례

본 절에서는 2014년 통계청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자체 가운데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던 금산군과 논산시, 귀촌 가구가 가장 많았던 서천군과 청양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는 별개로 통계상으로는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홍성군의 사례까지 총 5개 지자체 사례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1)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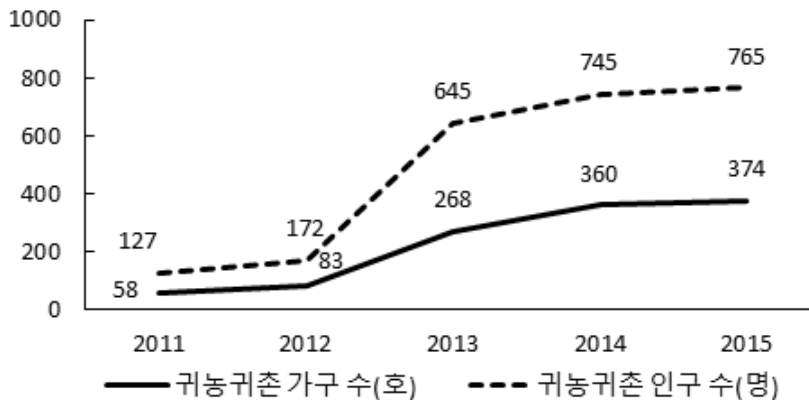
금산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 충남지역에서 귀농 가구 수가 118호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귀촌가구 수 59호와 합치면 총 177호였다. 실제로는 자체 조사 결과 2014년에 귀농귀촌 총 가구 수가 360호 745명에 달해 통계청 자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통계 자료에 의존해서는 실제 군으로 진입한 귀농귀촌수를 제대로 집계할 수 없으며, 이것이 귀농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년부터 금산읍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기 어려워 총계로 집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의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그림 8). 2011년 58호 127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268호 645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15년에는 374호 765명으로 최근 3년간은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산군 인구는 약 5만 5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연사망률이 높은 반면, 출생률이 낮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금산군의 인구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산군의 귀농귀촌인의 증가 이유로는 대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접근성과 금강 상류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인터뷰).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전 시내에 위치한 병원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여겨졌다. 금산군의 농업환경적 이점으로는 작목의 제한이 있는 내륙지역에 비해 저온성 산간지를 잘 활용하여 약초와 소규모 다품목 등 다양한 작목의 선택이 가능한 점을 들수

있다. 이러한 품목은 초기 자본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금산군은 들깨
 잎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만 하면 유통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으며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작목인 점에서 귀농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8] 금산군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 수

자료: 금산군청 자체 자료

금산군에서는 충남지역에서는 매우 빠른 시기인 2008년 7월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체계화하였고, 2014년 12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개
 정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 안에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
 고 있으며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00만원이다. 시설 보조에 대해서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
 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 금산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에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도시민 농촌유
 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후 2015년까지 총 18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귀촌 멘토-멘티 지원(각 80만원, 40만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67쌍이 농촌생활 적응 및 농업기술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 마을 주민이 주도가 되
 어 마을을 홍보하고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농촌, 농업을 체험하게 하기 위

한 귀농귀촌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원면의 명곡2리와 남이면의 석동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인 실습농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총 59개소 2.5ha에 대해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 교육 및 조직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군 자체에서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여왔다.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보다도 이주 후의 지역 주민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측면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따로 졸업생 모임 활동을 통해 서로 간에 정보 교환과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 교육을 마친 귀농귀촌인은 ‘금산군 귀농인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회원수는 50여명으로 귀농귀촌인 상호친목도모 및 영농 일손 나눔을 25회, 귀농인 현장으로 기술지원단을 13회 운영하고 있다.

금산군에서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초 영농 체험 및 교육 등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하는 귀농교육센터를 2015년 3월에 오픈하였다. 2012년부터 계획된 이 사업은 도에 이와 같은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진행되었고, 그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현재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하고 있다. 총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30억원이며 군에서는 추가 비용 20억원을 더 지원한 상태이다.



[그림 9] 금산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는 체류형 주택 16동, 기숙형 숙소 4실, 교육관 1동 및 텃밭과

공동실습농장이 조성되어 있다. 체류형 주택은 2가지 타입으로 평수에 따라 임대료(평당 1만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실습농장에서는 시설하우스 7동(400평)을 설치하여 딸기와 버섯, 열대과일 등의 재배 기술을 교육 하고 있다. 교육관에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된 직원이 1명 상주하면서 귀농교육센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귀농귀촌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지원 및 상담 업무는 기술지원과의 귀농귀촌팀에서 맡아왔다.

2013년 11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에 1차 사업을 준공하여 주택 13동, 교육관 1동을 지었다. 2015년 1월에는 2차 공사를 통해 주택 3동, 4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기숙형 숙소 1동과 공동실습농장을 조성하였다. 체류형 주택 입주 및 교육 기간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월에 1~3차에 걸쳐 총 20세대 40명이 입교하였으며 1차에서 13세대 28명, 2차에서 3세대 8명, 3차에서 4세대 4명이었다. 첫 퇴교자는 2015년 6월에 총 10세대 26명으로, 이 가운데 금산에 정착하여 이주한 사람은 9세대 24명으로 대부분 금산군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 이주자인 1세대(2명)의 경우는 금산군 내에 적당한 지역을 찾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하며 곧 금산군 내에서 정착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산군 관계자 면담).

귀농귀촌인에게 정착하기까지의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류형 귀농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시설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곳에 지내면서 귀농을 준비하던 대부분의 예비 귀농인들이 금산군 내에 등지를 틀게 된 것은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80억원이라는 투입 대비 연 4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체류형 공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활용 면에 있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왕에 시설이 세워진 것이라면 금산군에 내려와 있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농창업보육을 담당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동실습농장은 보다 실질적인 영농교육을 위해 희망하는 모든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관 역시 생산에서 가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이주해온 예비귀농귀촌인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 간의 공감과 이해라고 한다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발휘될 수 있는 공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논산시

논산시는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 귀농 가구는 114호로 충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귀농 가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귀촌 가구 61호와 더하면 귀농귀촌 가구는 총 175호였다. 2013년에는 귀농 가구 118호, 귀촌 가구 69호로 총 187호로 나타나 2013년에 비해 귀농, 귀촌 가구 수 모두 줄었다.

논산시에서는 2012년 3월에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논산시는 2015년 8월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귀농귀촌팀이 신설되었다. 그간 농정국에서는 정책 중심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중심의 귀농 귀촌 업무를 해왔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업무를 한 곳에 모으게 되었다. 2015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총 7,800만원이다. 그 가운데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외 4건이 3,8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8개소) 명목으로 농정과 예산이다. 그 외에 융자로는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3억원과 귀농인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 5,000만원이 있다.

논산시의 귀농귀촌 전입 추세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전입이 많으며 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충남의 시 단위 근접 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생산성이 높은 작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귀농인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금산 같은 경우, 껌잎이 높은 수입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는 충남의 다른 지역보다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딸기는 천평 미만의 규모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쌀이 1만 1천ha에서 1,3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에 반해 딸기로는 850ha에서 1,400억원대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¹⁴⁾.

특히 딸기와 상추는 논산에 집적되어 있어서 유통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작목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ICT의 도입과 양액 재배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귀농인들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이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정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첨단 기술과 관련하여 20여 가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공확률은 80%로 높은 편이다. 보통 지역 농민들은 8~10동의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반해 귀농인들은 4동을 재배하고 있

14) 이러한 작목의 선택은 귀농귀촌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IMF 때에 진입한 귀농귀촌 사례를 돌이켜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과수와 축산, 특작 가운데 딸기 작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30억대의 부농이 되어 있다고 한다.

으며 3~4년차에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40~50대에 귀농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아직은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생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한다. 고학력의 비율도 높아져 박사학위 소지자가 꽤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한 편으로 정보의 공유도 매우 빠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는 논산시에 집적되어 있는 딸기시험장(박사 5명)과 같은 인프라의 정비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논산시는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농어민대학에는 약 1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심화학과의 딸기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논산시의 귀농귀촌 인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귀농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융자금 이용 상황에서 추정은 가능하다. 2015년 총 48가구가 새롭게 융자금을 이용했으며 한 가구 2~3명으로 계산하면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유입 인구는 약 100명에서 14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귀촌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산시에서는 국방대학교 이전으로 정주권 개발이 이루어져 이미 100가구 정도가 이주해온 상태여서 수적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이러한 귀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창농을 통한 귀농인 중심의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귀농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26개 연구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단위의 단체들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부터는 논산시도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2015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으로 영농 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이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이루어졌다. 농업기술을 통한 품목 중심 영농 정착 교육과 농촌생활적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멘토-멘티 활동지원과 같은 멘토링 지원과 현장지원팀 구성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으로는 귀농연수원에게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을, 선도농가에게는 멘토 수당으로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으로 총 6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지원했다.

귀농지원센터는 귀농상담실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상담을 위한 창구로 마련되어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현장애로지원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는 1,700만원(도비 510만원, 시비 1,190만원)이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걸친 귀농지원센터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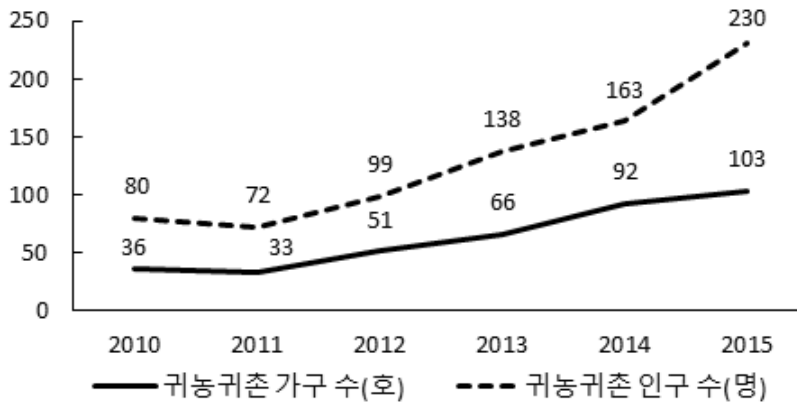
상담이 195건, 전화 상담이 490건이었고 상담자 현황으로는 귀농인이 52명, 귀농희망자가 190명이었다. 상담 후 귀농으로 실행한 수는 2014년 61명, 2015년 52명으로 총 113명으로 상담으로 인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 685건 가운데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보와 주택구입이 각각 210건, 농업기술 120건, 농지구입이 62건이었고 기타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상담 후 지원 실적으로는 총 514건 가운데 교육참여가 440건으로 가장 높았고, 창업 및 주택 등 정책자금 52건, 귀농인의 집 등 체류와 관련한 해결이 8건, 농기계 및 빈집수리비 등과 같은 지자체 지원이 3건이었다.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기 적응이 힘든 정착 3년 이내 새내기 귀농인의 교육과 멘토링을 위한 귀농현장으로 지원단은 500만원(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에 운영되고 있다.

3) 서천군

서천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 귀촌 가구 수가 329호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귀농 가구 수 62호를 더하면 귀농귀촌 가구 수는 총 391호였다. 서천군 내부 자료로는 2014년의 경우 귀농귀촌 가구는 92호(163명)로 되어있다. 서천군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의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 수는 다음과 같다(그림 10).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귀농귀촌 인구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4년의 경우 세대당 구성원 수는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의 경우 세대당 구성원 수가 2.2명으로 나타나 일년 사이 한 세대당 이주하는 구성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전반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당 구성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림 10] 서천군 귀농귀촌 가구 수 및 인구 수

자료: 서천군 자체 자료

서천군에서는 2009년 7월에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네 번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에 현재의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다. 귀농귀촌 업무는 2009년 건설과에서 시작되어 2013년 농림과로 옮겨갔고, 2014년 1월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귀농귀촌지원팀이 신설되었다. 귀농귀촌팀 팀장 외 2명과 전문상담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다.

2015년 주요 성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2014년 선정, 2년 차)이 추진 완료되어 4억원 예산으로 귀농인의 집 및 체험장 조성 등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센터의 2개소에서 귀농귀촌 정보 제공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실적으로는 2015년 1,711건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지원 정책이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빈집 및 토지 정보와 영농교육 안내와 주작목과 관련한 선택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것들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해 전국 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 6회 참여하여 2,114건의

문의를 받았으며 귀농현장애로지원단과 귀농투어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150명이 참가하였다.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신축으로 2동, 리모델링으로 3동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용은 40회로 267명이 머물렀다. 현재 서천군에는 총 4동의 귀농인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 자체적인 군비 확보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개소에 걸쳐 1억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자로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7건에 대해 8억 7천만원이 사용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귀농현장실습지원이 5개월간에 걸쳐 6개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선배멘토링제 운영은 1개월에서 10개월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5개소에서 진행되었다. 귀농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총 18명(9쌍)이, 2015년에는 22명(11쌍)이 실습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는 초급부터 중급, 심화 및 창업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초급과정 35명, 중급과정 35명, 심화 및 창업과정인 강소농 교육에서는 1차에서 3차에 걸쳐 각 35명씩, 4차에서는 45명이 참가하여 총 220명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천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프로그램인 ‘귀농어울림한마당’이 개최되었다. 2015년에 7회째 개최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 귀농귀촌 학습동아리인 ‘귀농귀촌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귀농인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연구회는 45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에 신규로 등록된 단체이다. 귀농인협의회는 회원 136명, 온라인 회원 3,670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서천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관련한 군 자체 사업은 다음과 같다(표 13). 총 약 1억 1천 5백만원 가운데 빈집정비사업과 귀농귀촌 주거조성을 위한 원스톱 프로젝트에 약 1억원이 쓰여지고 있으며 이외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비 및 관련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표 13> 서천군 귀농귀촌 자체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귀농지원센터 공공운영비	3,825	
- 보완용 cctv회선 사용료	1,320	공공운영비
- 전화사용, 난방연료, 침구세탁, 쓰레기 봉투비	2,505	공공운영비
빈집정비사업	50,000	민간자본보조
귀농귀촌 주거조성 원스톱 프로젝트	56,000	민간자본보조
귀농귀촌지원센터 자산취득	5,420	자산취득비
총 4건	115,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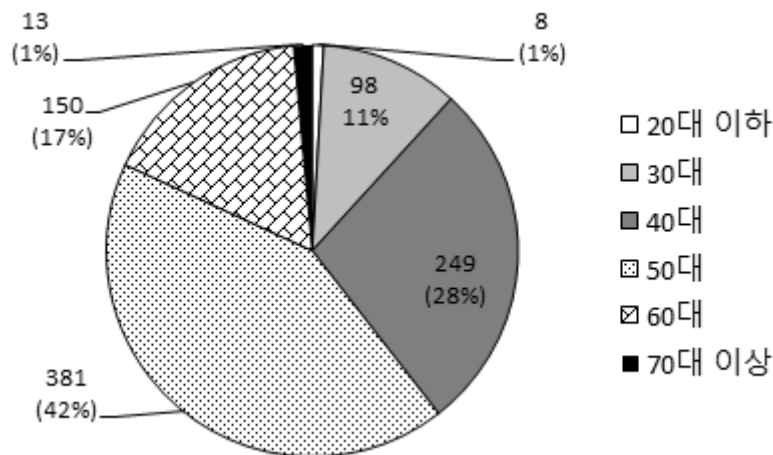
자료: 서천군 내부 자료

4) 청양군

청양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 서천군 다음으로 귀촌 가구 수가 높으며 294호에 달했다. 귀농 가구 수도 91호에 이르러, 귀농귀촌 가구 수는 총 385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2009년 10월에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한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012년에 처음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 기술지원과에서 분리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 담당 사무장¹⁵⁾은 2015년부터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양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귀농귀촌 상담 수는 총 899명으로 그 가운데 방문에 의한 문의는 57.3%(516명), 전화에 의한 문의는 42.7%(384명)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50대가 42.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7.7%, 60대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연령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74.5%(670명), 여성의 비율이 25.5%(229명)로 남성이 세배 더 높았다.

15) 작가인 신현철씨(67세)는 부인의 병환으로 귀촌을 결정하고 2014년에 약 한 달만에 경기도에서 청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칠갑산으로 유명한 청양군의 자연환경이 건강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일이었다고 한다.



[그림 11] 청양군 세대별 상담 비율

자료: 청양군 귀농지원센터 자체 자료

자체 조사 결과, 청양군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향’, ‘지원정책’, ‘지인 및 연고’ 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의 자연환경 및 지세와 평지, 물길 등 지형의 조화가 귀농귀촌인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고 보고 이를 홍보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지원정책 때문에 청양군을 선택한 수는 이전 조사 결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인 및 연고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청양군의 자체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청양군에서는 귀농교육과 관련해서도 두 번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선 2015년 3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되었던 ‘2015 귀농인 영농정착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조사(수료 교육생 21명 가운데 18명 유효 설문지)에서는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 여건, 교육과정 만족성 그리고 교육 결과 및 향후 영향 판정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 및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 요구 사항에서 추가로 필요한 교육 방식으로 가장 높게 요구된 것이 실습교육, 현장탐방, 사례발표의 순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작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이외에 초보자인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5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에 실시된 ‘제7기 청양군 귀농귀촌학교 교육과정’ (수료 교육생 35명)에서는 전반적 만족도 평가(기대감에 비하여 교육 종료 후 만족감), 교육과정 평가(내용 적합성, 충실도, 활용가능성), 학습 내용의 적절성 평가(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 이해, 활용 가능성)의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함’ 으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 내용 개선을 위한 구술 요청사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은 ‘교육 시간이 짧다’ 라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조사 대상이었던 교육생이 20명에서 30명 선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육 내용을 더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양의 경우도 귀농귀촌인은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서의 유입이 많은 편으로 그 중, 50대의 귀촌 가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려는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지역 농민의 경우, 본인이 살지 않더라도 쉽게 집을 남에게 내놓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농민과 귀농귀촌인 양쪽에 대해 빈집을 잘 활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중재의 역할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의 경우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만큼 역귀농 하는 인구도 약 40%로 높은 편이며, 그 이유로는 ‘일거리 부족’ 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촌으로 지역에 들어온 이들도 영농 활동이나 그밖에 일거리를 찾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역귀농의 사유 가운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은 예상보다 적은 편이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불만으로는 문화적 측면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양의 역사와 문화 부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5) 홍성군

홍성군은 2014년 통계청 조사 결과, 귀농 가구 수 74호, 귀촌 가구 수 91호로 총 165호로 나타났다. 현재 홍성군은 인구 9만 2천명으로 읍내에만 5만명의 인구가 결집되어 있다. 그 중 정년퇴임 후 50대 이후의 귀촌은 홍성 서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젊은 층의 귀농귀촌은 홍동면이 많은 편이다. 홍성군 귀농귀촌인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꾸준한 상황이다.

홍성군은 2009년 9월에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 10월에 전부 개정된 이후 2015년 12월까지 총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2013년 10월에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성은 재배 주력 품목으로는 한우, 한돈, 딸기, 고추, 벼 등이 있고 재배 유망 품목으로는 쌈채소, 냉이가 있다(귀농귀촌종합센터 자료). 홍성군에서는 ‘귀농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이름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 예산은 총 3억 4천 8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국비가 1억 3천만원, 도비가 2천 5백만원, 군비가 약 2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비 가운데 자체 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약 6천 6백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농촌진흥청)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귀농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영농정착기술 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사업이 절반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은 출퇴근 하는 농업인턴제로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5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농가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터뷰). 지원 사업 운영 초기에는 인턴과 선도 농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칭하고 시작하였으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인턴과 그러한 수요를 인지한 농가가 미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자신들끼리 짝을 지은 후에 기술센터에 신청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귀농인 육성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7대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귀농현장애로지원단운영에 총 500만원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애로지원단운영과 애로지원단 현지출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설명회 및 귀농투어가 1,0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운영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비로 지원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사

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총 2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억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절반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1.5대 8.5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지원되고 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민간 협력 기구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추진 및 빈집, 농지조사와 귀농귀촌인 조사 및 귀농 귀촌인 상담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귀농인 체류형공간 및 실습농원조성 지원에 3,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홍보물 및 홍성군 특화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 배포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귀농인 새내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지원 및 학습소모임 활동지원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지원에 1천만원의 지원이 되고 있다.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지원의 경우, 멘토에게는 20만원(교육보상비)이 멘티에게는 10만원(실습재료비용)이 지급되며 10개소, 20명(5개월 간)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 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 어울림 행사에 5백만원과 지역리더 연계 귀농귀촌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역밀착형 유형별 맞춤형 귀농투어가 1,000만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1:1 개인 밀착형 영농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1,500만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농부 작업장 ‘온’ 프로그램에 2,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곡면에 위치한 협업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지역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은 1,000만원이 지원되며 홍동의 마을활력소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젊은 농부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젝트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동에 위치하고 있는 밝맑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친환경 꾸러미사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홍성의 귀농지원연구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은 홍동면과 장곡면을 중심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귀농귀촌지원센터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거치지 않고 입소문을 통해 바로 귀농의 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귀농인들은 장곡의 협업농장이나 홍동의 마을활력소와 밝맑도서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몸소 체험을 함으로써 정착의 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수혜가 귀농인들에게 바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4> 홍성군의 지역 활동 지원 사업

프로그램 이름	활동 단체명	지역	지원액
청년농부 작업장 ‘온’	협업농장	장곡	2천만원
청년 지역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마을활력소	홍동	1천만원
젊은 농부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젝트	밤밖도서관	홍동	2천만원
친환경 꾸러미사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귀농지원연구회	홍성	5백만원

자료: 홍성군 내부 자료

귀농귀촌 정착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표 15). 총 약 6,700 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차량 임차 그리고 참석한 대상자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진다. 다음으로 귀농인 집들이 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1,000만원으로 실시 중이다. 실시 초반에는 2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2015년 현재 50만원이 지원되며 이 비용으로 마을에 처음 정착한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주민과 집들이를 통해 교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외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1,200만원의 지원을 통해 4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직거래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로의 확보가 비교적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의미있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귀농귀촌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 토착농민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이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500만원 지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50만원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귀농인 정착지원 업무 보조로 1,5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쓰인다. 그 외 기본경비로 700만원이 쓰이고 있다.

<표 15> 홍성군 귀농귀촌 자체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행사	10,300	
- 교재제작, 강사수당, 차량임차	7,500	행사운영비
- 참석보상	2,800	행사실비보상금
귀농인 집들이 보상	10,000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4개소)	12,000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3개소)	12,000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정착지원 업무보조	15,46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경비(기타)	7,000	
- 기본수용비	3,000	사무관리비
-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 시설유지관리	3,000	공공운영비
- 귀농 현장업무 추진	1,000	국내여비
총 6건	66,768	

자료: 홍성군 내부 자료

그 외에도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과 귀농귀촌 가족 수련회 및 사랑방 운영지원,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및 재능 나눔 활동지원, 청년 농촌 마을학교 운영, 지역에 대한 현장 공부 및 방문을 통해 지역의 정착을 돕는 ‘마실이 학교’ 운영, 귀농귀촌인 선진귀농탐방 프로젝트,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과 텃밭학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6> 홍성군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면서 홍성을 둘러 볼 수 있는 거주형 공간 (임대료 월10만원 사용자부담)	예비 귀농 희망자
귀농귀촌 가족 수련회 및 사랑방 운영 지원	홍성군 내 귀농귀촌인 과제교육, 현지 연찬, 신규 귀농인 간담회와 사랑방 운영 및 지원	홍성군 내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및 재능나눔 활동 지원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홍성군 내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청년 농촌 마을학교 운영	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홍성군 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청소년
마실이 학교 운영	지역과 현장 공부를 통한 정착 지원	귀농귀촌한 이주가족 및 이주 희망가족
귀농귀촌인 “선진귀농탐방” 프로젝트	농촌체험마을 시기별 농사 및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작목별 재배, 농기계 이용 기술, 생활 실용 교육 등 (3~11월)	새내기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 희망자
텃밭학교 운영	작목별 영농기초 교육 및 실습 (월 2회)	새내기 귀농귀촌인

자료: 홍성군 내부 자료

3. 흥동 사례 연구

1) 귀농인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해 충남지역 귀농귀촌 정책 방안을 위한 가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홍성군의 흥동을 사례로 토착농민의 시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흥동은 지역의 정서적 기반인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의 토착 농민들의 많은 노력으로 정비된 오랜 유기농업의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귀농귀촌인이 찾는 곳이다. 특히 전문적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로 이어지는 유기농업의 계승과 다양한 시험적인 협동조합의 움직임이 실현되고 있는 측면에서 귀농귀촌을 지향하는 젊은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토착 농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¹⁶⁾.

- 최근에 많은 귀농인들이 흥동을 찾고 있는데 이미 유기농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흥동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 귀농인들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정말 농사를 지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마을 귀속감을 더 느껴줬으면 좋겠고, 소통도 더 필요한 것 같다. 귀농인들은 밖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재능도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재능의 활용으로 토착 농민이 풀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귀농인으로는 15년 전에 이곳에 온 000씨가 있었는데 지금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

- 이제 농업은 젊은이들을 양성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과 실기, 교육과 실천이 함께 해야 화합이 가능한 농업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을 해낼 수 있는 젊은이들을 기르기 위해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농업대학 인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 이것은 2014년 하반기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착 농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미 골이 깊은 상태인 것 같다. 마을의 일 같은 경우도 풀무학교 출신 귀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지역민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바램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 귀농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사명감으로 마을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아쉽다.

-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없는 편이라고 하겠다. 10명 중 두 사람 정도가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직장을 다닌다고 보면 되겠다. 마을 주민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더 많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있다.

- 이렇게 유기농업을 통해 마을을 찾아주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호뭇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다.

- 지금의 귀농인들은 비닐 멀칭까지도 꺼려하는 등 보다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 농가 인터뷰)

여기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고 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소통을 기대하는 토착 농민도 있었다. 이렇듯 귀농인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여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와 이로 인해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흥동에는 과연 어떠한 귀농귀촌인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들의 농업과 지역에 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다양화 하는 귀농귀촌

홍동에서 살펴본 귀농귀촌은 현재 1990년대 중반에 형성된 제1세대 귀농인 그룹과, 2000년 중반에는 그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유입된 제1.5세대 귀농인 그룹,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유입된 제2세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의 특성에 맞는, 보다 현실적이고도 유용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귀농귀촌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최근 2~3년에 나타나고 있는 2세대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귀농 1세대 1명과 귀농 1.5세대 1명, 귀농 2세대 3명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각 귀농 세대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사례가 반드시 각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시하고자 한다.

(1) 귀농 1세대: A씨

1990년대 말 귀농을 결정한 A씨는 귀농운동본부가 막 결성되던 시기에 커리큘럼 강사들에게 홍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당시 귀농운동본부에서는 주로 생태와 환경, 공동체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고, 귀농운동본부 이외에도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정농회 등이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홍동에 먼저 귀농한 선배로 귀농운동본부 1기 선배가 있었다. 당시 홍동, 장곡, 광천에는 귀농인 선후배 모임이 있었으며 농업과학통신연구회, 농민신문, 관련 서적을 통해 귀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보통 이러한 귀농 1세대들은 소량, 다품종, 가족농, 농기계자립을 통한 농업을 추구해 왔으며 잉여농산물은 판매로 이어졌다. 귀농의 성공과 실패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 즉, '할 나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웃을 선생님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한해 농사를 마치고 영농일지를 A4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식탁과 안방, 화장실에 붙여놓고 농사를 익히던 시절이었다. 귀농 1년차 때의 영농일지로 다음 해 농사가 가능했다.

농사가 안정되기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영농실패는 귀농실패로 이어져 이 것이 탈농의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귀농 1세대들은 지역 안으로 흡수되어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수집과 주위의 농가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겠다.

(2) 귀농 1.5세대: B씨

2007년에 처음으로 귀농하여 2008년에 홍동으로 이주한 B씨는 귀농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는 약 2~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귀농 초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으로 ‘저런 나이드신 분들도 농사짓는데 젊은 내가 못해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첫째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홍동에서의 첫 수입 평균은 약 40~50만원으로 귀농 1세대 중에서는 첫해부터 1,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B씨의 경우도 첫해에는 약 200만원의 수입이 다였다.

이렇듯 귀농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농사라고 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는 기존의 생각들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직접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하는 2차적 지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2009년부터 3가구에 꾸러미를 시작하여 수익성은 시작하고 6개월만에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의 신념과 의지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와의 관계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효한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한다. 한 박스에 25,000원 일주일에 30박스씩 꾸러미를 2년간 하다가 안정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60박스를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있다. 지금은 꾸러미 한 박스에 30,000원이다.

지원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품목별연구회를 조성하여 귀농인들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는 1년간 2억원 규모로 귀농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책 같은 경우, 잘못 지원하면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귀농운동본부에서 15명 정도의 귀농인들이 현장 투어를 온다고 하면 마을 내의 귀농인 3명이 다섯명씩 나누어 맡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없으면 아무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농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귀농선배, 즉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홍동에는 귀농인들간의 친목 모임인 일명 싹쓸이파들은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SOS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귀농한 친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젊은 층은 거주공간과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다. 현재 홍동에는 약 100개의 소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친한 그룹은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한 곳에서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뜻을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면 된다. 계속해서 모임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점점 찾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4년 사이에 귀농한 친구들은 주관이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귀농한 세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홍동의 경우는 농촌 이외의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30년 된 빵집, 50만원 월급의 마을활력소, 씨앗도서관, 뜰 등 필요에 의해 다양한 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난다고 하겠다. 즉 언제든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지역농민의 자녀들은 풀무학교를 졸업한 한국농수산대학 출신이 많은데, 대학에 들어가서 단작과 규모화된 농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며 이러한 후계자들 때문에 귀농의 기회를 상실하는 귀농인들도 있다. 홍동 유기농업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농회 멤버들조차도 후계자의 수가 적은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기존의 선배들은 1ha 이내의 자급자족적 농업을 지속해왔으나 여기에서 거리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귀농해서 자립하기까지는 약 2~3년이 걸리는데 1~2년 사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국 밭에서 극복해야 한다. 2~3년 사이에 인정하기 시작하고, 3~4년이 되면 포기하게 된다. 마을주민과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금전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최근 3~4년 전부터는 가족들과의 정착과 땅을 사서 집을 지으라고 권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홍동에 혼자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생협에 올인하는 생산자는 적어지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홍동 장곡 귀농인 모임은 꾸러미 15군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가족과 함께 귀촌하는 30~40대 귀촌인들은 귀농인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이고 마을 일에만 겨우 참여하는 정도이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두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풀무학교 전공부를 통한 정착으로 8년 전만 해도 다양한 연배로 구성되어 그 중에서 특히 혼자 귀농하는 여성들이나 가족이 함께 귀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대 초반의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년간의 교육으로 농사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연배이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금방 지쳐버린다고 하겠다. 또 너무 큰 규모의 농사로 인해 농업으로 자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여건이 마련되어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전공부 내의 모임이 형성되어버려 전공부 이외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독립된 교육기관이 되면서 귀농인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측면이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최근 1~2년 사이에 귀농한 20~30대 그룹으로 방황하는 젊은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그룹에게 귀농인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가족과 함께 귀농한 30~40대 그룹이나 20~30대 솔로 그룹은 단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향은 자립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 감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즉 지역 내 문화나 젊은 귀농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손기술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존의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인프라 형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주민과의 상대적 박탈감 없이 거리감을 줄여가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흥동이 안고 있는 다양한 그림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흥동 전체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있다. 다시 말해 흥동에서도 유기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는 존재하며 그러한 농가들도 흥동 전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작년부터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성향이 많이 달라서 상처를 많이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귀농귀촌 3세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3) 귀농 2세대: C, D, E씨

귀농 2세대의 귀농 동기는 다양했다. 2014년에 홍동에 들어온 C씨는 서울 생활 중,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살고 있구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던 가운데 귀농하게 되었다.

삼선재단에서 귀농인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매달 8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 4년이상 살아야 하는 조건으로 이제 막 귀농을 결심한 단계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업에 집중하는 귀농을 목적으로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농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농업에 관해서는 농부를 만나가면서 참 농사를 찾아서 농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C와 함께 서울에서 옥상텃밭 활동을 통해 만나 홍동으로 오게 된 D는 서울에서 텃밭 활동을 하던 중, 보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하고 싶던 차에 홍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1년간 한 달에 한번 서울과 홍동을 오가며 귀농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선은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두 번 홍동을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홍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6명의 친구들과 홍동에 이미 내려와 있던 2명의 친구들 총 8명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보다는 시골 지역에 연고가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주위에 다들 초보이기는 하지만 홍동으로의 귀농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다. 주로 반농반X를 꿈꾸어 왔던 주위의 젊은 귀농인들은 청년허브,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등에서 활동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보는 지인들을 통해 얻게 되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을 만나는 행사를 지원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준비하는 농촌마을학교에서는 인턴십 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홍동의 땅과 집에 대한 정보는 풀무학교 출신 2명에게서 얻게 되었다. 인건비와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는 귀농하는 이들에게는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지역농민과 같이 일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땅과 집을 임대하겠다는 토착농민들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잘될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 논은 기계화로 인해 고령화 되어도 농사짓기가 편해서 홍동에서 구하기는 어렵지

만 받은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이장님에게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귀농선배들에게는 선후배관계 가운데 역할 부여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어 있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꼈다. 지역주민 만큼이나 귀농세대들과의 소통이 어려웠고, 프라이버스 확보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주위에는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마을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서 농업에 포커스를 둔 귀농을 하고 싶었는데 귀농에 목표로 한 친구들이 적었다. 특히 흥동 내에서는 갯골이라는 관계망이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역 토착민과 교류하고 싶은 갈증을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초반의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한 활동은 같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일을 추진해 가는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어 해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집도 다시 구해야 하게 되었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일을 다시 찾아야 하게 되었다. 함께 일했던 8명 가운데 4명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2명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농사와 관련한 문제는 지역 토착 농민의 후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극복했다.

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와 풀깎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며 귀농한 사람들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농사에 집중하고 있는 10명 정도와 교류하고 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내왔고 일차적인 생산이 중요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농사를 지어가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자립한다’는 의미에서 농촌을 택하게 된 E씨는 사회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왔으며, 삶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가운데 농사에 관심이 있었고 자립이라는 삶의 변화에 흥미를 느껴 변상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립하는 삶을 꿈꾸었으나 자립하기에 앞서서 자기 먹는 것만 해결되면 많은 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어떤 형태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사는 자급만 가능한 정도에서 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쪽 일을 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다. 즉 ‘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공동체생활을 거쳐 부안의 사업체에 있다가 서천을 거쳐

다시 홍동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현재는 홍동의 집짓기 협동조합인 얼렁뚱딱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회체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농을 결정했지만 기존의 사회 즉 도시생활과는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위화감은 존재했다. 홍동에 와서는 조합을 통해서 독채 빈방을 빌려 살았고, 1년 후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다가 한달 전부터 귀촌으로 마을에 들어오게 된 귀농인이 얻은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임대할 땅이 없어서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집 50평과 농지 50평의 총 100평의 토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촌을 접한 것이 공동체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었다. 이에 비해 귀농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현지의 토착 농민과 접하게 되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귀농초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귀농귀촌인의 교류로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원책은 주소지를 옮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아직 귀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실은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살고 싶다고 생각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은 필요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지원 자체가 위화감으로 느껴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은 에너지 측면에서 건달만 하지만 겨울은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다. 실업급여 같은 것도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신청하는데 심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생활비와 관련한 부분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지원받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역 안에서는 마을활동이 아직 많지는 않다. 또래가 아직 없으며 지역 주민과의 연결고리나 공통분모가 없어서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 바탕에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없다는 것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귀농인들과는 유대감이 있는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귀촌의 기반이라고 하겠다. 진정으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수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해 참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낼만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다. 홍동은 축사가 많은 곳으로 생각만큼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즉 인적 네트워크가 흥동의 큰 매력이라고 하겠다. 현재도 고민 중이지만 앞으로 작은 공동체를 꾸려보고 싶다. 이를 통해 소통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현재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4,596가구로 전년 32,424호에 비해 1.4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업 및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행할지에 따라 지역의 농업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차보전사업으로서 용자에 대한 부분과 귀농귀촌활성화사업으로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을 통한 창업과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상환 시기가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빚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주여건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탐색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의 지원 대상을 지역 내 취업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귀촌인에게까지 확대한 점은 농어촌 지역에 내려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기까지 임시적인 거처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임시거처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체계적 사전준비’에 대한 지원책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되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아직까지는 획일적인 지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 특색을 살리고 지역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율적인 운영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삶의 질 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은 혼자서 지역에 내려와 농업 및 농촌 생활에 어려움

을 느끼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하는 지원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귀농정책은 있으나 귀촌 정책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농촌에서 생활하는 귀농귀촌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 의료, 복지생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필요한 부분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이 된다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차산업화와의 연계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상을 귀촌인은 물론 안정적으로 농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부수적인 수입이 필요한 귀농인들에게도 확대하여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산 부분인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농업부분에 대한 가공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6차산업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된다면 지역 농민은 물론 귀농귀촌인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업체와의 연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퇴직자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 희망자에 따른 특화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남도의 귀농 정책 방향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성공하는 귀농’을 비전으로 ‘우수인력 1,500가구 유입, 정착률 전국 최고 유지’를 목표로 유입과 정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유입을 위해서 핵심 계층별로 전략을 차별화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업 창업 지원을 늘여가고 있다. 정착과 관련해서는 귀농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계별 교육과 실습교육 강화, 컨설팅과 귀농대학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귀농귀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체류형 귀농창업보육센터 1개소가 금산에 설치되었고, 귀농인의 집이 총 6개군에 22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귀농인의 집은 홍성군이 11개소가 가장 많았고, 금산군 2개소, 부여군 2개소, 서천군 4개소, 청양군 1개소, 2015년도에 예산군에 2개소가 마련되었다.

충남지역의 귀농 가구 수는 2014년 현재 1,237호로 나타났으며, 귀촌 가구 수는 1,321호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귀농이 2,012명, 귀촌이 2,460명이었다. 귀농 가구는 2013년 1,177호에 비해 5.1%(전국 2.0%) 증가하였으며, 귀촌 가구는 2013년 679호보다 94.6%(전국 55.5%)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세보다 높았다. 귀농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산군(118호)과 논산시(114호)

순으로, 귀촌 가구 수는 서천군(329호)과 청양군(294호)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귀촌 인구는 서울과 경기도로 부터의 이주가 많았고, 귀농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에서의 이주가 많았다. 전입가구원 수는 2013년 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2인 가구 수의 비율이 늘었다. 귀촌 가구 가운데 남녀 가구주 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9배 높았으며 총 연령대별 귀촌 가구 수는 5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가 재배하는 작물로는 채소, 두류, 논벼, 특용작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원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2007년 부여군에서 가장 빨리 제정되어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8년에 금산군, 2009년에는 보령시와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의 순으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충청남도에서도 조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례는 주로 ‘귀농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조례에는 귀농귀촌의 ‘정의’에 대한 기술에서부터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있었고, 충남으로 이주하기 전의 기간과 전입한 후의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한 곳도 있어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소속부서에 따라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귀농귀촌 업무는 건설과, 농업정책과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되고 있다. 보통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귀농귀촌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시 단위에서는 도시농업이나 도농교류의 관점에서 지원되고 있기도 했다. 또 논산시의 경우에는 소득 작목에 대한 영농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인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친환경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지자체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2014년 통계청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던 금산군과 논산시, 귀촌 가구가 가장 많았던 서천군과 청양군,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찾고 있는 홍성군의 사례까지 총 5개 지자체 사례를 정리했다.

금산군에서는 2011년부터 금산읍을 제외하고 귀농귀촌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대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접근성과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귀농인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저온성 산간지역의 이점을 살린 약초와 소규모 다품목의 작목 선택, 그리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들깨잎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초

점을 두고 귀농인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른 시기부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결과 농업 기술에서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귀농귀촌대학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금산군은 2007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까지 총 18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구상을 시작하여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비 대비 혜택 가구 수가 적은 것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체류형 공간에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논산시는 금산군 다음으로 귀농 가구 수가 많은 곳으로 딸기와 상추 재배가 특화된 지역으로 농업 창업 작목으로 이러한 작목에 초점을 두고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왔다. 특히 ICT 기술의 도입과 딸기 양액 재배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적응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 논산이 가지는 기존의 농업적 인프라 기반이 귀농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은 충남지역에서 귀촌 가구 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점과 땅값이 저렴하다는 것이 이주의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일찍부터 있었고, 이것이 서천군의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양군은 서천군 다음으로 귀촌 가구 수가 많은 곳으로 귀농지원센터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2014년에 기술지원과에서 분리되었다. 현재의 사무장이 귀농귀촌 지원을 담당하면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체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의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청양군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연환경’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귀향’, ‘지원 정책’이었으며 ‘재배 작목’이라는 항목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역귀농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일거리 부족’으로 나타나 농업 외적인 일거리를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 농촌지역을 다시 떠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실제적인 영농기술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업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도 했다.

홍성군은 통계적으로 집계되는 귀농귀촌인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귀농귀촌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역별로는 50대 이후 귀촌의 경우는 홍성 서부 지역이, 젊은 층의 귀농귀

촌은 흥동면이 많은 편이다. 흥성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착을 위한 탐색 기간 중에 주소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 대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성향은 흥동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 귀농귀촌하는 세대별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흥동에 들어온 귀농귀촌 1.5세대의 경우 흥동에서 이미 유기농업이 정착된 후에 진입하여 귀농귀촌 1세대에 비해 유기농업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에 비해 귀농귀촌 2세대는 다양화된 동기에 의한 진입, 다양화된 농법에 대한 관심 등 기존의 귀농귀촌 세대와는 성향이 달라서 그에 따른 변화된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귀농귀촌 1.5세대가 마련한 기반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성립 조건 자체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귀농귀촌 2세대들은 영농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농업에 전념한다는 측면보다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농업 인력 공급의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귀농귀촌 1.5세대가 만들어놓은 인프라가 귀농귀촌 2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화된 귀농귀촌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귀농귀촌의 방향 잡기가 선행되어야만 귀농귀촌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제언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귀농귀촌에 관련된 정책은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 왔으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는 매칭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의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지원금 규모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정부에게는 귀농귀촌의 ‘유입’과 관련된 역할이 강조되어 온 반면 지자체에게는 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귀촌인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역점을 두어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 지역으로의 ‘유입’과 ‘유치’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당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인력의 확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위해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 정보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지역까지 내려오는 불편함을 없애면서 귀농귀촌을 위한 충실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귀농귀촌 유치 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는 과잉 인구가 대도시권에서도 복지 부양 등 지역 사회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귀농귀촌 전문가 인터뷰).

그렇지만 귀농귀촌은 유입 자체보다도 이미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역귀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역귀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마을을 떠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지역에 잘 정착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만족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지 모른다. 따라서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자체가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더 보여 주어야 한다.

귀농귀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선 지금까지의 귀농귀촌 정책이 어떠한 대상을 목표로 펼쳐져 왔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대상은 귀농귀촌을 목표로 하는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을 품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귀농귀촌의 정의는 처음 목표가 농업이 주요 소득 목표였는지 아닌지와 같은 것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이 주 소득 목표인지 아닌지로 하기에 언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귀농귀촌의 목표를 가지고 농어촌 지역 내로 진입해 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귀농과 귀촌의 구분이 분명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용자 등 그에 맞는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진입 단계에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대상자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금산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따로 나누지 않았고 이는 군의 지원 사업 자체가 양쪽을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귀농귀촌 교육의 경우에도 귀농인이나 귀촌인 모두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귀농귀촌인 가운데는 주거지 이전이 이루어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으로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 앞으로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주 공간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기간은 길어서 나쁠 것이 없다. 이러한 신중함은 또한 귀농귀촌인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입장에서 더 낫다. 충분히 지역을 훑어보고 여건을 타진하고 또 그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는 일이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마을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가 귀농귀촌 협의회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귀촌 지원은 정말 필요한가

귀농귀촌에 대한 동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이 높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 지원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영농에 관련된 재배 작목의 선택 및 영농 기술에 관한 교육은 청양군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귀농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귀농 분야도, 귀촌 분야도 지역에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유지에 관한 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한 교육은 젊은 귀농귀촌인이 마을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일일지 모른다.

특히 젊은 귀농귀촌인의 기존의 사회 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 등의 전문 분야나 손기술 등을 이용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원은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은 크게 보면 농촌 활성화 지원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귀농귀촌 전문가 인터뷰).

사실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상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원 정책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역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농인의 집’ 운영과 같은 지원은 초기 귀농귀촌인에게는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인의 집 지원을 살펴본 결과, 전북의 고창군과 경남의 거창군에서는 반 이상의 귀농인의 집이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이었고 나머지 곳에서도 도의 지원으로 임대료의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귀농인의 집을 더욱 늘려가는 방안이나 공공 임대 주택 마련과 같은 지원은 충남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지자체별 주체적 역량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시군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매력적인 부분을 도입할 것이냐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비슷한 사업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귀농귀촌의 한정된 지원 정책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 사례가 충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이 된다. 홍성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인 집들이 보상’과 같은 지원은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집들이 비용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이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류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해보면 좋은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 지역 내의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홍성군과 같이 협업농장이나 마을활력소, 밝맑도서관 등 홍동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은 결국 이러한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귀농귀촌인들 가운데는 주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이 제한 등 귀농귀촌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 안에 지원 정책을 둬으로써 귀농귀촌을 꿈꾸는 혹은 이미 귀농귀촌을 실행한 젊은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업 아이템 이외에도 논산시와 금산군과 같이 농업 창업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이나 대학의 운영 내용을 농업 기술 쪽으로 강화하거나 서천군과 청양군과 같이 귀촌 지역으로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한다면 지역 정체성을 부각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귀농귀촌 지원 업무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귀농귀촌의 경험이 있는 센터의 사무장이 주도가 되어 상담과 후속 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센터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지원팀의 소수의 인력으로는 상담 전화만 받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센터가 본래의 귀농귀촌 자체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지역의 농지 정보나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낸다면 지역의 유휴 농지나 빈집의 활용의 측면에서 지역의 입장에서든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든 신뢰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또 최근 충남의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순환보직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접근이 가능한데, 귀농귀촌 업무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귀농귀촌도 역시 6차산업화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부문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시군별 통합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 39. pp. 59~98
- 강대구(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pp. 743~771
- 김백수 · 이정화(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농촌사회 제23집 2호. pp. 7~48
- 김성수 · 정지웅 · 임형백 · 고운미 · 김정태 · 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11권 제1호. pp. 53~65
- 김성학 · 서정원(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농촌계획. 제20권 제1호. pp. 105~113
- 김정섭(2014). 귀농인의 사회 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3호. pp. 53~89
-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3호. pp. 533~556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205~223
- 마상진 · 남기천(2015).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별 관련 요인 탐색. 농촌사회. 제25집 1호. pp. 89~122
- 박공주 · 윤순덕 · 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제12권 제4호. pp. 63~76
- 박대식 · 남승희(201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농촌사회. 제25집 1호. pp. 41~87
- 박성정 · 이선주 · 진명숙 · 장희영(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만용 · 구자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제12권 제2호. pp. 145~171
- 송미령 · 성주인 · 김정섭 · 심재현(2015).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KREI농정포커스 제10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39~60

유정규 외(2011). 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유학열 외(2012). 충남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유학열(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충남논단. 봄. 충남연구원. pp. 18~25

조영재 · 조은정(2013).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제19권 4호. pp. 191~202

진양명숙(2015). 귀농귀촌 정책 담론을 통해 본 농촌성 연구. 2015년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pp. 23~38

최윤지 · 신호연(2015).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2015년 한국농촌 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pp. 89~101

홍성효 · 송정기 · 김종수(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 진안군의 사례. 농촌사회. 제22집 2호. pp. 49~82

황정임(201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세미나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효섭(2014). 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법과 정책. 제20집 제2호. pp. 239~2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2014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 자료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홍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내부 자료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기홍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5-40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방안

글쓴이 · 김기홍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2월31일 / 발행 · 2015년 12월 31 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4,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34-6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